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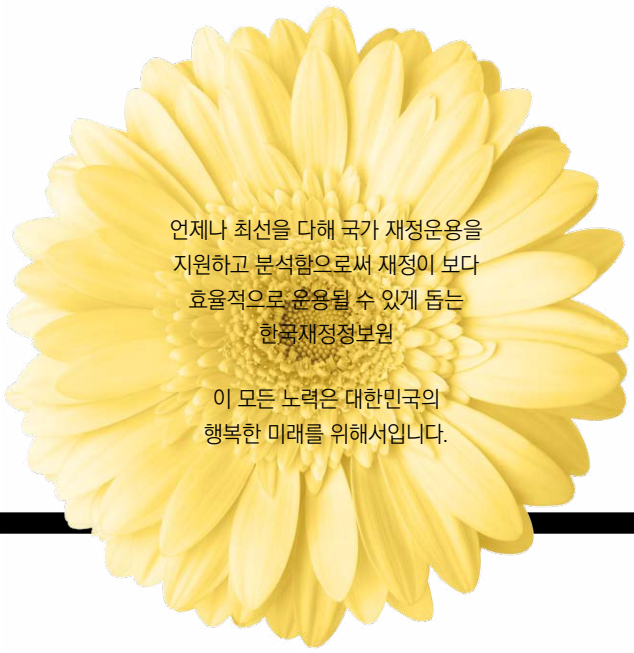
Oct. 2019
Vol. 34
10

재정 INSIGHT
- KPFIS 인사이트
- 재정칼럼
- 톺아보기

재정 NOW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키워드 재정
-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 이달의 재정 이야기
- 재정 Talk Talk
-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언제나 최선을 다해 국가 재정운용을
지원하고 분석함으로써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돕는
한국재정정보원

이 모든 노력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미래 디자이너'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한국재정정보원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Vol. 34 October. 2019

재정 INSIGHT

04 **KPFIS 인사이트**
①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한 재정의 경기조절
김명규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② '디지털 트윈', 현실과 연결되는 가상세계와 디지털 혁신
오중석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지능정보위원회 기술사

18 **재정칼럼**
① 중소기업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② 성과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R&D 예산 배분 방향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6 **톺아보기**
중소기업 R&D

재정 NOW

28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① 최근 재정통계
② 분야별 통계 : 국방 분야

40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 병역

44 **해외재정동향**
영국의 재정위험 전망 :
英 예산책임청 발간, 「재정위험보고서」

재정 STORY

48 **이달의 재정 이야기**
청년을 위한 행복한 주택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

52 **재정 Talk Talk**
국민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요?

54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명품에 대한 욕망이 세계 최대의 국가를 만들다

58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세금 운송 때문에 안면도가 섬이 됐다?

62 **KPFIS의 서재**

64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활용부 | 02-6908-8583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01
KPFIS-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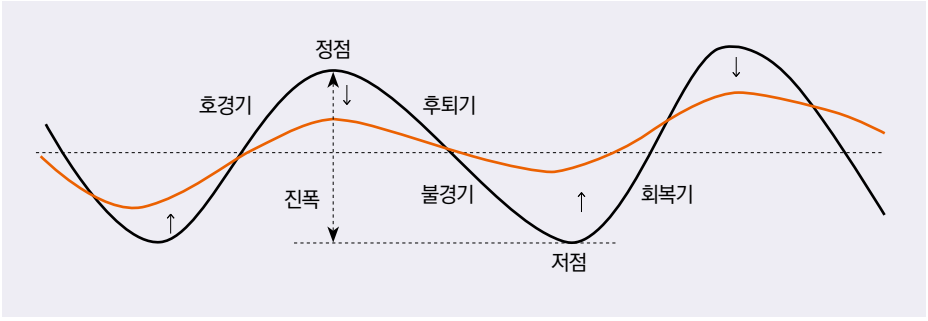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한 재정의 경기조절

김명규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mkim@kpfis.kr)

01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

경제는 경기 주기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있다. 국내외 경제 충격으로 국내 경제 상황이 변하는 경우 고용상황과 소득수준도 같이 변하게 된다. 급격한 경기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경기의 급격한 침체 시 기업의 매출 감소 및 부도, 대량 실업을 유발할 수 있고, 둘째로는 경제주체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확대돼 국민과 기업이 경제적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게 만든다. 이에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 급격한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와 기업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통화량을 확대하는 통화정책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완화되도록 유도한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경기변동의 진폭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경기 안정화 기능이라고 한다.

그림 1. 경기변동과 안정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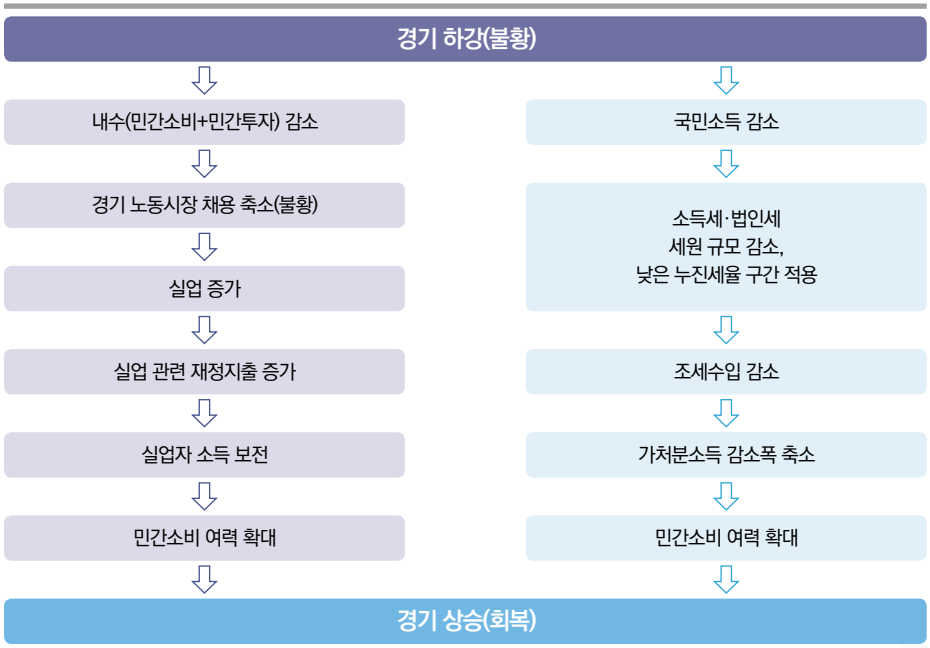
02 자동안정화 장치의 개념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기 안정화에 매번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이고 구조적으로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 제도들이 있다. 이를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라고 한다. 즉, 정부가 경기 상황에 대응하여 재정지출과 조세개편 등 재량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수입이 변동하여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경기 불황(호황) 시에 실업급여, 저소득층 지원 등 재정지출이 증가(감소)하고,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도 감소(증가)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경기 조절기능을 담당한다. 자동적이라는 의미는 관련 제도 도입 후에는 정부가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재정지출과 수입이 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안정화 장치의 작동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출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실업관련 재정지출이 있다. 경기 불황 단계에서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로 대표되는 내수가 감소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채용 규모가 축소되어 실업이 증가한다. 실업 증가는 실업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를 유발하여 실업급여로 실직상태의 소득을 보전하여 민간소비여력을 유지하여 경기 불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와 같은 누진적 구조를 가진 조세체계가 있다. 경기 불황기에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개인과 법인 소득규모가 줄어들고,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규모가 줄고,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득에서 조세 부담액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의 감소폭이 축소하면, 경기 불황기의 민간소비 여력이 회복되고 경기 불황을 완화시키는 효과로 작용한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 경기 불황(과열) 상태에서 경기 회복(진정)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림 2. 자동안정화 장치의 작동 흐름



03 자동안정화 장치의 장·단점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는 경기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시차[1]가 비교적 짧아 경기대응의 적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상황을 인식한 이후, 대응 정책 개발, 국민 의견 수렴, 입법과정, 국회 동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수행한다. 하지만 자동안정화 장치는 이러한 정책시차 없이 비교적 빠르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고,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조정·반영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상태에서 비근로상태로 전환되고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 즉시 정책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만으로는 경기 충격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충격을 충분히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 통화정책이나 재량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므로 자동안정화 장치는 기초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자동안정화 장치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재설계 과정이 필요하다.

04 우리나라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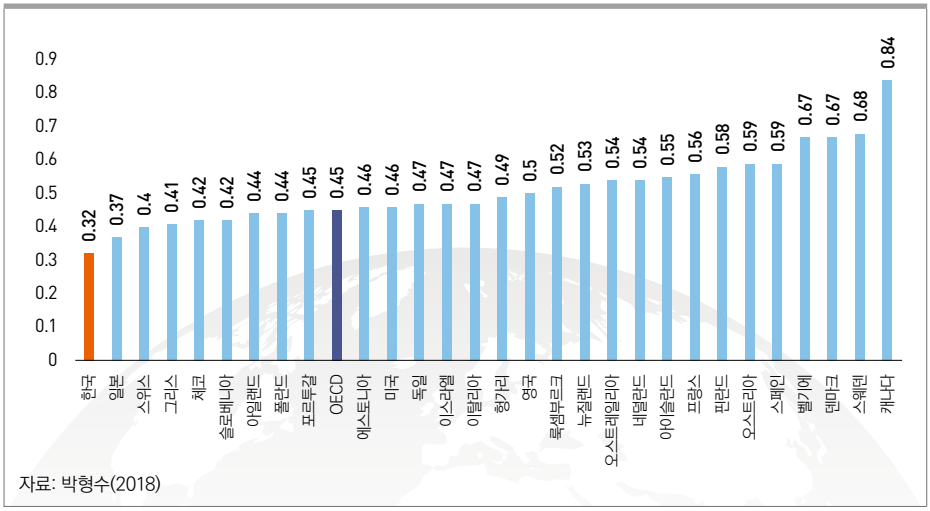
재정의 경기에 대한 대응성은 크게 자동안정화 장치의 효과와 재량적 재정정책의 효과로 나타난다. 재량적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은 경기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실업 대책, 기업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정책이나 예비비 집행을 의미한다.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규모에 대한 측정은 경기변동에 대한 재정수지 변화의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를 살펴보면, 박승준·이강구(2011)에서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를 1995년 0.1307[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0.2361로 추계하였으며, 박기백·박형수(2002)에 따르면, 1985년~2000년 동안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는 평균 0.21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박형수(2018)에서는 1985~2016년간 일반정부의 자동안정화 장치의 크기를 0.32로 추계하였다. 또한, OECD

1 정책시차는 정부의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수립 이후 효과를 유발하는 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 자동안정화 장치 규모에 대한 해석은 GDP gap이 1%p 증가 시, 재정수지가 GDP 대비 0.1307%p 만큼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DP gap%는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차감한 이후 잠재 GDP 나눈 백분율 값이며, GDP gap%가 양(+)의 값이면 경기과열, 음(-)의 값이면 경기둔화 상태로 판단한다.

주요 회원국의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를 비교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자동안정화 장치의 크기는 OECD 평균대비 62% 수준이었으며, 세출(20%)보다는 세입(57%)이 더 큰 경기조절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를 강화하여 재정이 경기변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3. OECD 주요 회원국의 자동안정화장치 규모 비교



자료: 박형수(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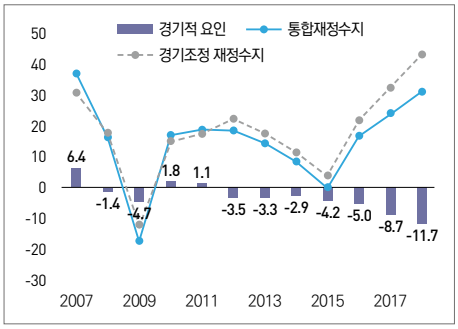
dBrain에서 생산된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결산자료(중앙정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를 추계하였다. 자동안정화 장치 규모 추계 시 사용하는 잠재GDP는 OECD와 IMF에서 발표한 잠재 GDP 평균을 사용하였다. 경기조정 재정수지 산출방식은 IMF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기적 요인을 산출한 후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를 계산하였다[3].

분석결과, 경기적 요인에 따른 재정수지[4]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기준 모두 2012년 이후 재정수지 규모를 축소시키는 모습이다. 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로 인해 재정수지 규모가 경기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때 보다 줄어든다는 것[5]을 의미한다. 2018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의 경기적 요인은 11.7조 원이고, 관리재정수지의 경기적 요인은 10.7조 원으로 측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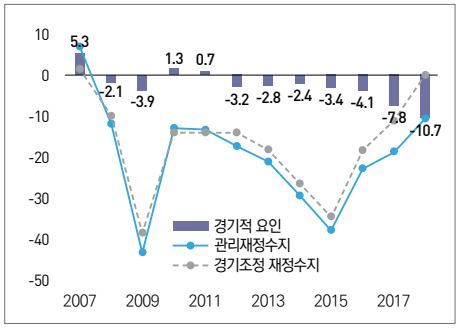
3 자세한 추계방식은 김명규(2019)를 참고하기 바란다.
4 경기적 요인에 따른 재정수지는 재정수지에서 경기조정 재정수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5 경기둔화로 예상(잠재상태)보다 조세수입이 줄어들고,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재정수지 적자를 의미한다.

그림 4.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경기적 요인: 2007~2018

〈통합재정수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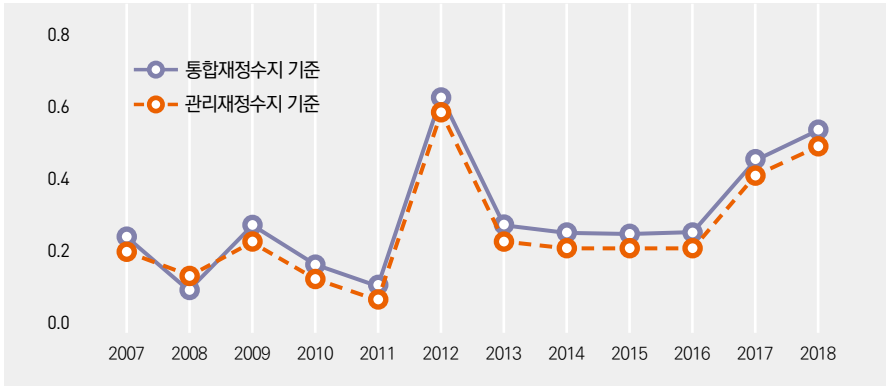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기준〉



자료: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경기적 요인,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저자 추계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는 경기적 요인 규모를 GDP gap% 절댓값으로 나누어 추계할 수 있다[6]. 분석결과, 2007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의 평균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0.29였고,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는 0.26이었다. 추계한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는 앞서 설명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따른 누진성이 강화된 것과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그림 5. 우리나라의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 추이



주: 결산기준
자료: 저자 작성

6 자동안정화 장치 규모 = 경기적 요인 규모(GDP 대비) / GDP gap%의 절댓값

05 자동안정화 장치의 경기 대응성 강화 방향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는 급격한 경기 변화로 인한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자동안정화 장치는 재량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기초적인 경기조절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자동안정화 장치의 크기가 가장 작다는 점도 경기 대응성 제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자동안정화 장치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향은 자동안정화 장치의 관련 제도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변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안정화 장치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7]. 세입측면으로 살펴보면, 우선 개인소득세는 누진도가 확대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자동안정화 장치의 효과가 향상된다. 누진도는 소득의 한계세율을 높이고,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공제항목을 축소함으로써 증대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

7 이하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자동안정화 장치를 강화하는 이론적 측면에 대한 논의이며, 실제 제도로의 구현은 더욱 다양한 제도 검토를 통해 도출된다.

8 박형수(2018), p.122.

는 실제 면세점 구간이 높아 누진성 강화의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의 경기 대응성 강화는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세출측면에서는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급여 정책의 강화를 통해 경기 안정화 효과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크게 급여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캐나다,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미국 등 많은 국가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8].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기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여 보장성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탄력적인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급여정책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자동안정화 효과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확장실업급여(Extended Benefits)는 1970년부터 연방법으로 개별 주정부의 고용보험실업률이 정한 기준치를 넘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50%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요재원의 50%를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실업급여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특별연장급여를 통해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급여란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 제도이다.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취업이 어려운자들로, 수급조건을 완화하거나 지급일수(현행 최대 60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보장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의 경기조절은 급격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량적 재정정책도 있으나, 이와 더불어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해 경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또한, 자동안정화 장치의 강화는 재량적 재정정책 추진의 행정비용이 클 때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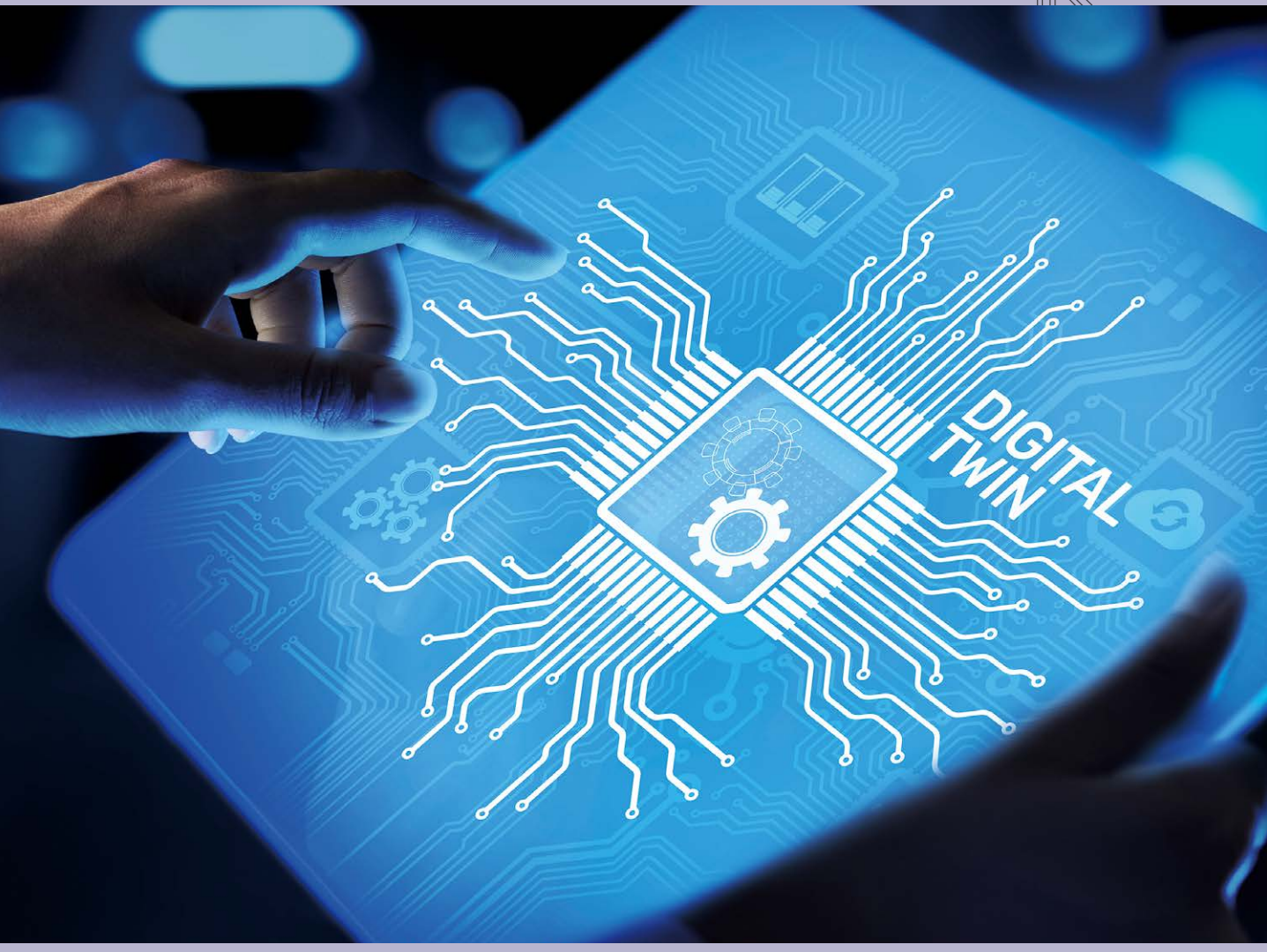
참고 문헌

- 김명규. (201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재정수지 산출방안」, 재정정보분석 19-03, 한국재정정보원.
- 박기백·박형수. (2002).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 박승준·이강구. (2011).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자동안정화장치를 중심으로-」, 경제현안분석 제62호, 국회예산정책처.
- 박형수. (2018). "재정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2018년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2018.10.26.) 발표자료집.
-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09), 「Fiscal Implications of the Loc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IMF Occasional Paper 269.

02
KPFIS-인사이트

‘디지털 트윈’, 현실과 연결되는 가상세계와 디지털 혁신

오중석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지능정보위원회 기술사(bioles@hanmail.net)



01 개요

그림 1. 가트너 10대 전략적 기술트렌드(201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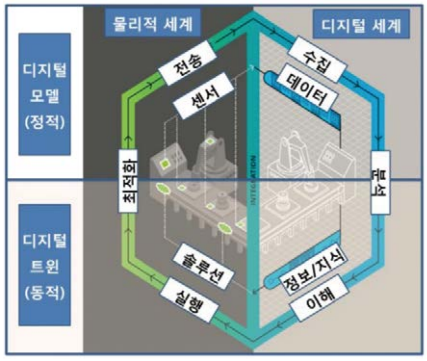
자료: 가트너 홈페이지(www.gartner.com)

미국 정보기술 연구 및 자문회사인 가트너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디지털 트윈'을 주목해야 하는 전략적 기술로 선정해오고 있다. 가트너는 매년 10월에 10대 전략적 기술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는데 2020년에도 디지털 트윈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트윈은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화두인 안전사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02 디지털 트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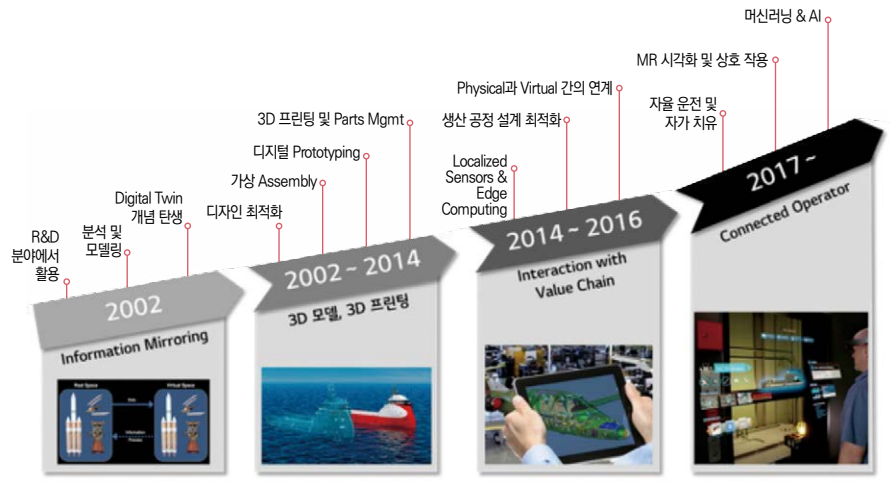
디지털 트윈은 컴퓨터 속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예측하고, 컴퓨터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현실에 반영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센서, 무선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팅 파워, 데이터 스토리지 등의 비용이 낮아지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림 2. 디지털 트윈의 정의



자료: 딜로이트(2017), Yole Development(2016)

그림 3. 디지털 트윈의 진화



자료: Schneider Electric, 「The Digital Twin in Oil & Gas」, 2017.

03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혁신

복잡한 구조로 돌아가는 공장 현황을 사람이 직접 가보지 않고도 운영실에서 전체 공정의 흐름을 한눈에 보고, 오류를 조정하며, 공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소품종 대량생산을 하던 과거와 달리 21세기에는 개인 취향에 맞는 다품종 대량생산이 요구된다. 매번 사람이 들어가 공정을 조정한다고 하면 생산 비용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다. 결론은 모든 공정의 자동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설비 전반에 대한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공정을 조정하고 최적화한다면 낮은 비용으로 다품종 대량생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트윈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드론 같은 무인비행체를 통해 화재를 진압할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은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설계, 시공, 감리 시 작성했던 설계도와 서로 다르고 공유도 되어있지 않다면 드론은 갈 길을 잃어버린다. 가상세계에서 정확한 설계정보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의 센싱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한다면 앞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04 디지털 트윈 국내 적용 사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디지털 트윈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물 관리를 혁신하였다. 기존에는 도로시설물 점검을 위해 다량의 도면을 들고 다니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일일이 사진을 찍어 도면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국 도로공사는 도면을 모두 디지털화하여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하고 모바일을 통해 이를 현장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점검과 입력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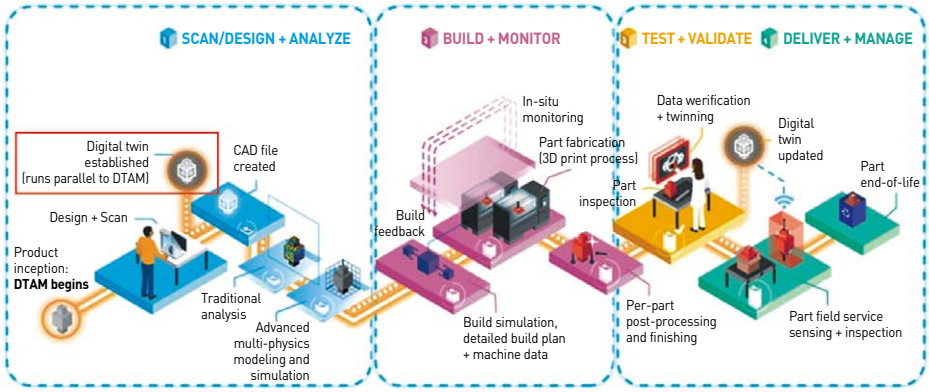
자료: 지더블류캐드코리아 블로그

하였다. 그리고 결함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고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작업시간을 40% 이상 단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앞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에는 센서와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한 시설물 파손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노후로 인한 시설물 교체 시기를 지능적으로 예측하는 등 더욱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05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

그림 4. 3D Opportunity and the Digital Thread



자료: Deloitte, 「3D Opportunity and the Digital Thread」, 2016.

디지털 트윈은 디자인/분석 단계에서 만들어진다. 주로 캐드(CAD) 파일 형태로 제작된다. 디지털 트윈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경사항이 항상 반영되고 운영정보가 실시간으로 집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CAD는 아직 표준 파일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제품마다 파일형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의 모든 과정이 특정 CAD 제품에 록인(Lock-in) 될 수 있다.

과거의 설계도면은 설계만 만들고 끝이었지만 디지털 트윈에서의 설계도면은 살아있는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구축 후 운영 도중에 CAD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표 1. 국내 2D CAD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구분	AutoCAD (LT포함)	GstarCAD	ZWCAD	BricsCAD	CADian
2014년 점유율	58.1%	1.1%	0.3%	0.6%	2.0%
2016년 점유율	55.1%	3.8%	0.8%	미집계	6.0%

자료: Modoo Solution, 「2017 2D CAD 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 2018.

정보기술산업(IT)의 오라클 DB 사례를 볼 때 대안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벤더가 유지보수 비율을 높게 책정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공공에서는 국산 DB 티베로가 오라클 DB를 대체하고 있으나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까지 완전한 대체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CAD로 돌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AutoCAD의 경우 영구 라이선스를 없애고 구독형 서비스로 라이선스 체계를 변경하였다. 과거와 같이 영구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업그레이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다.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역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배력 없이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받아볼 청구서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현실세계의 디지털 전환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가속화되려고 하는 현재 시점에 외산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의 국산화도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PUBLIC FINANCE COLUMN

중소기업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1]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hjchang@hufs.ac.kr)

01

1960년대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해외 주요 국가와 유사하게 주로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 기술개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급변하는 시장환경 및 기술수준의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변동의 영향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기업의 지속성을 쉽게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자금지원 중심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 글은 저자의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2016),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2018)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밝힌다.

의 정부 시장개입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성과 개선에는 기여하였지만,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노용환, 2010; 우석진·이기영, 2013; 이경원, 2012)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분야를 대상으로 자금지원뿐 아니라 기술확보, 시장확대, 인력확보, 컨설팅 등 정책혼합(Policy Mix)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제가 가능하다. 2010년대 들어서 정부지원도 자금난, 인력난, 판로난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자금 등 소액 지원 및 단일 사업 중심의 기존 지원정책뿐 아니라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과 같이 지원자격을 강화하는 대신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정책패키지를 제공하는 R&D 지원정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편성과 함께 선택과 집중형 투자를 통해 선별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논거이다.

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한 정책패키지의 확대로 인해 정부지원의 중심이 단일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정부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기제의 왜곡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최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보편성과 선별성을 동시에 갖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 등과 관련하여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정부지원의 효율성(이상미, 2014: 125)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지원은 보편성과 선별성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진입장벽이 낮은 기존의 단위사업은 성장성 등 단기적 효과 창출을 지향하고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과 같이 진입장벽이 있는 '선택과 집중형'의 선별적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수익성,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 중장기적 효과 창출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편적 사업은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선별적 사업은 '피터 팬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기부여 기능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둘째, 반복적 정부지원을 통한 성장성 확대, 고용증가, 기술개발 효과라는 긍정적 기능을 고려할 때, 선별적 지원사업은 지원규모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원성과에 따라 반복적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과' 또는 '잉여'를 의미하는 가외성(Redundancy)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지원의 중복 또는 반복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실제 사회현상에서는 긍정적 기능도 수행한다(Felsenthal, 1980: 248-249; Landau, 1969: 348). 즉 동일한 둘 이상의 기능이 중복되어 있지만 어느 한 기능을 제거할 경우 행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총 긍정적 가외성이 나타나며, 특히 주 기능과 보조 기능이 동시에 실행되는 병렬적 가외성에 의해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Bendor, 1985: 127-135; Felsenthal, 1980: 248-249; Landau, 1969: 348-351). 최근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중 정부가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들에서 중복 또는 반복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총 긍정적 가외성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정책패키지의 조합과 비중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을 통한 고용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배영임, 2015; 이병헌·김선영, 2009),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선별적 지원사업은 업종과 중소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기술확보, 시장 및 판로확대, 마케팅 및 컨설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 인력확보 등 정책패키지의 조합과 비중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산출물인 수익성 중심의 중소기업 경영성과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사업화 및 고용창출 효과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결과와 정책영향에 대한 효율성 논의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R&D 확대를 위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R&D 지원사업의 초·중기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익성보다는 경

영규모 확대가 고용창출 또는 고용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처럼(장현주, 2016),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R&D 지원사업의 수혜기업당 평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대규모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좀비기업이 아닌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최근의 인식에 비추어보면, 자본재산업과 R&D 집약산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컨대, 2010년대 들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상생과 동반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지원의 효율성에 관한 논의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아 보편성이 높은 기존 사업뿐 아니라 최근 들어 중소기업 R&D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하는 선별성이 높은 정책패키지 사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도 이러한 논의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효율성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지원이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단기적 수익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와는 다른 '선택과 집중' 중심의 정부지원은 투자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 노용환. (2010).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미시적 성과 분석과 역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2권 제1호, pp.153-175.
- 배영임. (2015). "중소기업 R&D활동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R&D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3호, pp.75-83.
- 우석진. 이기영. (2013). "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인과적 효과 분석." 「재무연구」, 제26권 제2호, pp.183-211.
- 이경원. (2012).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평가." 「2012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 377-384.
- 이병헌·김선영. (2009). "정부 R&D 지원사업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노동리뷰」,제55권, pp. 72-84.
- 이상미. (201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 분석." 「GRI 연구논총」, 제16권 제2호, ,pp.123-150.
- 장현주. (2016).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2호, pp.355-346.
- 장현주. (2018).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성장단계의 조절효과와 반복적 정부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8권 제4호, pp.251-275.
- Bendor, J B. (1985). Parallel Systems: Redundancy in Governmen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elsenthal, D.S. (1980). "Applying the Redundancy Concept to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0, No. 3, pp.247-252.
- Landau, M.(1969). "Redundancy,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verlap".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9, No. 4, pp.346-358.

PUBLIC FINANCE COLUMN

성과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R&D 예산 배분 방향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jiwoongy@khu.ac.kr)

02

대한민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R&D 지원사업규모를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8% 이상 증가시켜 왔다. 특히 최근 지원규모 확대 외에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소위 유니콘 기업 2개, 코스닥 기업의 51% 양성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자평한다.

이러한 괄목상대한 양적인 지원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R&D 여건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다. 노민선(2019)은 연구원 10인 미만 영세 연구소 비중이 2014년 91.0%에서 2018년 95.9%로 늘어났고, 기업 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투자 비중도 2007년 26.6%에서 2017년 21.9%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R&D자금과 인력면에서 모두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기업 대비 1개사당 연구개발비 비중이 2007년 2.4%에서 2017년 1.3%로, 대기업 대비 1개사당 평균 연구원 수 비중도 2007년 5.4%에서 2017년 4.7%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노민선, 2019).

이는 어쩌면, 기존 학자들이 이야기한 시장경쟁 속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R&D의 고정비용분산효과(Fixed-cost-spreading Effect)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연구환경과 여건이 좋은 분야와 조직을 찾아가는 연구자들의 선호표출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시장환경이 지속되면, 대기업으로 R&D자원이 몰리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추세를 다시 표현하면, R&D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구자에게 감내 가능한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현재 중소기업 R&D지원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중소기업에게 단기간의 소액 R&D 자금지원을 주로 해왔다. 현재 평균 1년에 1억 원의 과제가 68%나 되었다고 한다(2019. 8. 정부 발표). 또한 저변확대형 R&D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64%가 혁신역량이 중간 이상인 기업들이다. 이러한 지원은 혁신의 저변확대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전적인 R&D를 할 유인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의 R&D지원체계는 단독 R&D지원과 산학연 간 협력 R&D가 축소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2018년 과제 수의 61% 정도가 기업 하나가 단독으로 하는 과제였다. 이 비중은 2013년 48.5%, 2015년 51.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이는 폐쇄형 R&D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17년 WEF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수준은 137개국 중 27위다. 이 순위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온 지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 R&D 효과적인 예산배분의 방향은 일정규모 이상 R&D자금으로 경제의 동력(Dynamics)을 유지하면서 지나친 시장 집중도의 증가를 경계하고, 개방형 R&D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 들어와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R&D지원 기간 이슈다. 오승환·김선우(2018)는 혁신 측면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기업은 자체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후 3년까지 증가분과 증가율이 높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앞으로 단년도 지원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다년도 지원사업을 다양한 차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개방형 R&D 지원체계의 구축이다. 물론 지금도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산·학·연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R&D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예산만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 및 출연연의 성과평가체계가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 고려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출연연에 기술개발을 위탁하여 R&D 직접수행에 따른 실패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이 대학·연구원의 우수한 인적자원, 연구장비 등 기술 인프라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R&D예산의 간접지원방식과 직접지원방식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간접지원은 현장에서 기업의 투자액이나 기술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행해지는 세액공제, 출연금이나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그 규모 면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명화 외(2018)는 대표적인 두 가지 항목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신고현황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간접지원 규모는 1조 892억 원이며, 이는 중견기업과 대기업(1조 877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다(권명화 외, 2018). 2016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직접지원하는 규모가 약 3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직접지원 대 간접지원 비중은 73 : 27 정도로 생각된다. 이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향후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최적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현실에서는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R&D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혼합한 정책(Policy Mix)을 추진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체코, 아일랜드 등은 직접지원의 비중이 더 높은 반면,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등은 간접지원의 비중이 더 높다(OECD, 2017). 우리의 경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직접지원은 연평균 12.4% 증가하여 간접지원(8.7%)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고 한다(권명화 외, 2018). 결과적으로, 비중 면에서 간접지원보다 직접지원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지난 8월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관계부처협동으로 내놓았다. 기본적으로 R&D 지원체계를 단독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정부가 세심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지원체계 혁신방안에는 직접지원에 대한 방안이 대부분이고, 간접지원에 대한 것은 찾기 어려웠다. 향후 범부처적으로 중소기업 R&D의 효과적 지원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긴밀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처방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참고 문헌

- 권명화·김희용·한웅용·박석종·진영현·배용국·최태정·양은진·김주일·박창대·조성표. (2018). "정부 R&D 투자 이슈와 정책 과제 : 오래된 쟁점에 대한 새로운 논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노민선. (2017).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제17-05호, 중소기업연구원.
- 노민선. (2019). "중소기업 R&D투자 현황과 전망."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제19-02호, 중소기업연구원.
- 오승환·김선우. (2017). "[중소기업 R&D 정책 특집 시리즈 ①]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STEPI Insight, 제211호.
- David, P. A., Hall, B. H., and Toole, A. A. (2000). "Is Public R&D a Complement or Substitute for Private R&D? A Review of the Econometric Evidence." Research Policy, 29(4-5) : 497-529.
- OECD. (2017). "R&D Tax Incentive Indicators in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7: The Digital Transformation." Paris: OECD Publishing.

※ 톺아보다: 샅샅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중소기업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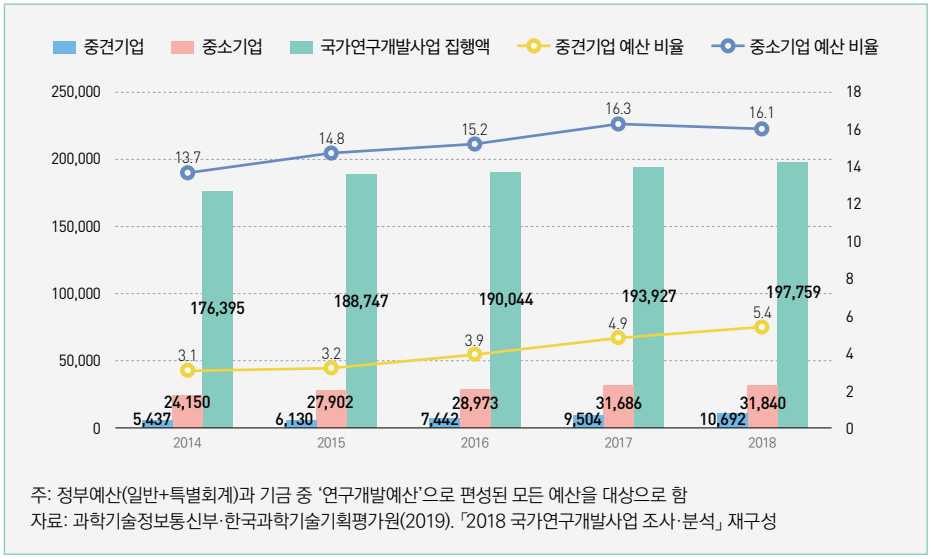
최정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ungwoo1088@kpfis.kr)

□ 최근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도 지속 증대

○ 정부예산 중 연구개발예산은 2018년 결산 기준 19.8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정부 연구개발은 3.2조 원(16.1%)으로 2014년 2.4조 원(13.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그림 1. 중소기업 수행 국가 R&D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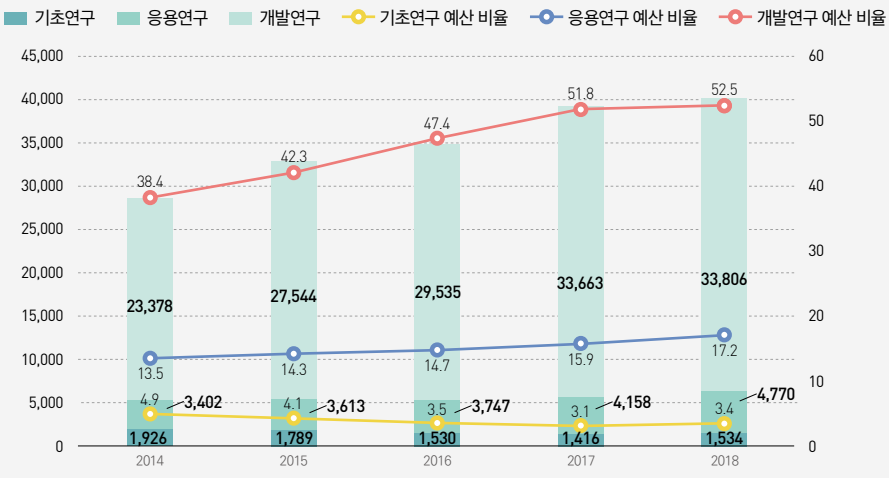


주: 정부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재구성

□ 연구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견 및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새로운 재료·제품 생산 및 공정·시스템 설치 등과 관련되는 개발연구의 비중이 2018년 기준 62.5%로 높은 편이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

그림 2. 중소(중견)기업 수행 R&D의 연구개발단계별 비중

(단위: 억 원, %)



주 1) 기초연구: 새로운 과학적 지식 획득과 관련된 실험 또는 이론적 연구
응용연구: 특수한 실용적 목적과 관련된 독창적 연구
개발연구: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료·제품·장치 생산, 공정·시스템 설치 등과 관련된 연구
2)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연구비'로 인해 R&D 예산 총액과 불일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재구성

□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0년에도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

○ 중소기업 혁신 지원, 기업규모 및 역량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R&D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2,651억 원, 창업성장 기술개발 4,790억 원 등의 연구개발 예산 투입 계획

○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대와 관련하여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1,581억 원, 소재부품지원센터 기반구축 990억 원 등에도 예산 편성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kr)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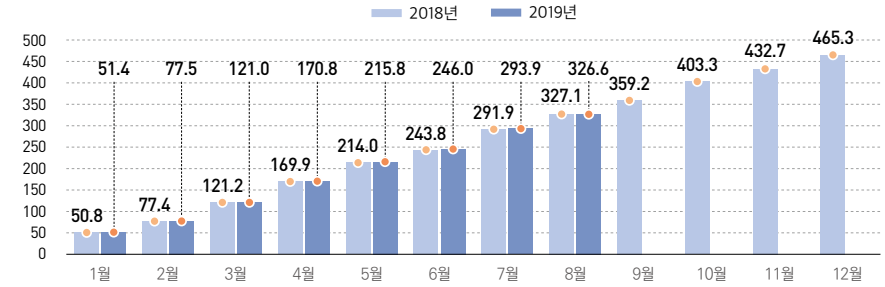
1. 최근 재정통계

총수입

2019년 8월 중 총수입은 32.6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326.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조 원 감소하였으며 진도율[1]은 전년 대비 1.7%p 하락한 68.6%이다. 이는 국세수입 209.5조 원(전년 대비 3.7조 원 감소), 세외수입 16.8조 원(전년 대비 1.6조 원 감소), 기금수입 100.2조 원(전년 대비 4.8조 원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

총수입
326.6조 원

총수입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2019년 8월 중 국세수입은 20.2조 원(법인세 11.9조 원, 소득세 6.3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209.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 원 감소하였다. 세수 진도율[2]은 71.1%으로 2018년 결산 기준 진도율(72.6%) 대비 1.5%p 하락하였으나 최근 5년(2014년~2018년) 평균 진도율(70.2%) 대비 0.9%p 상승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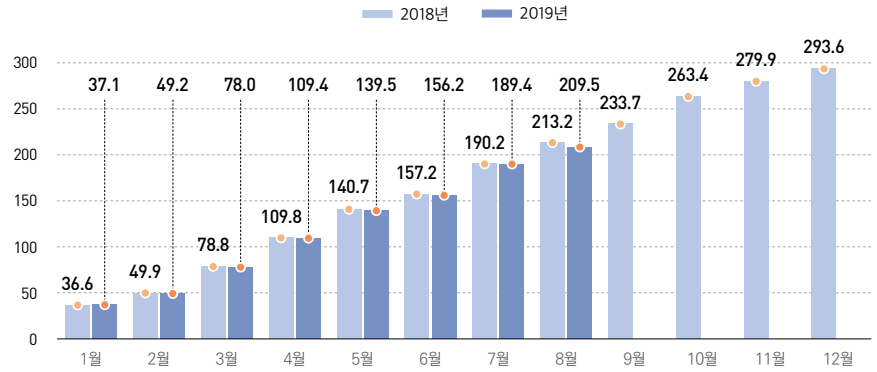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수입 예산은 447.7조 원이며 2019년 추경 기준 총수입 예산은 476.4조 원이다.

2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국세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국세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국세수입 예산은 268.1조 원이며 2019년 추경 기준 국세수입 예산은 294.8조 원이다.

국세수입
209.5조 원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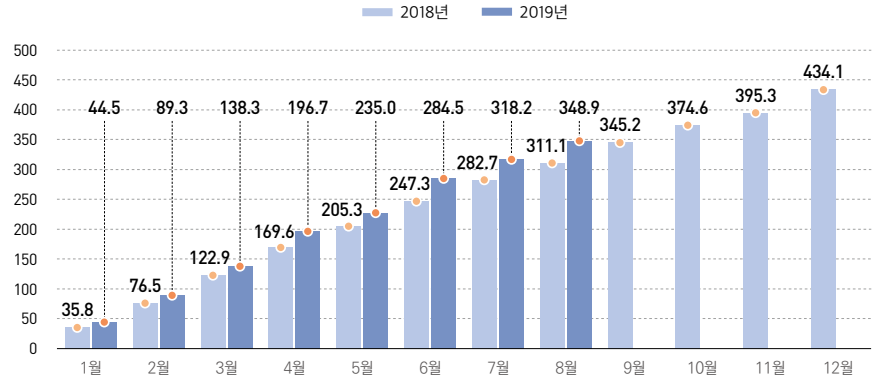
총지출

2019년 8월 중 총지출은 30.7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348.9조 원이며 진도율[3]은 73.4%로 전년 동기 대비 37.8조 원 증가(진도율 1.5%p 상승)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245.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7.1조 원 증가하였고, 기금은 93.2조 원으로 전년 대비 6.3조 원 증가하였다.

총지출
348.9조 원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3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지출 예산은 432.7조 원이며 2019년 총지출 예산은 469.6조 원이다.

2019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4]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8월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은 196.4조 원으로, 연간 계획(252.6조 원) 대비 77.8%를 집행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는 162.8조 원(연간 계획 대비 78.0%), 40개 기금에서는 33.6조 원(연간 계획 대비 76.7%)을 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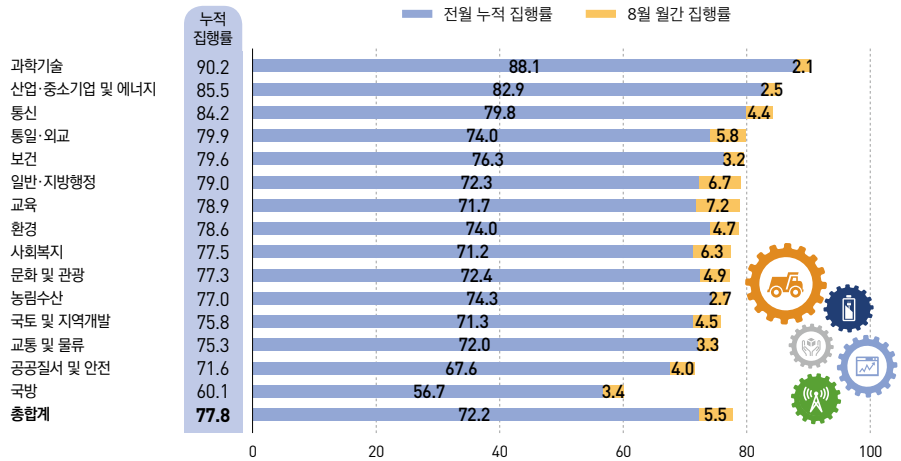
8월 말까지의 주요 분야별 집행률은 과학기술(90.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85.5%), 통신(84.2%), 통일·외교(79.9%) 분야 순으로 높으며, 국방(54.9%), 사회복지(62.8%), 일반·지방행정(64.7%) 분야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8월 월간 집행률은 5.5%이며, 분야별로는 교육(7.2%), 일반·지방행정(6.7%), 사회복지(6.3%), 통일·외교(5.8%)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누적 집행률
77.8%

월간 집행률
5.5%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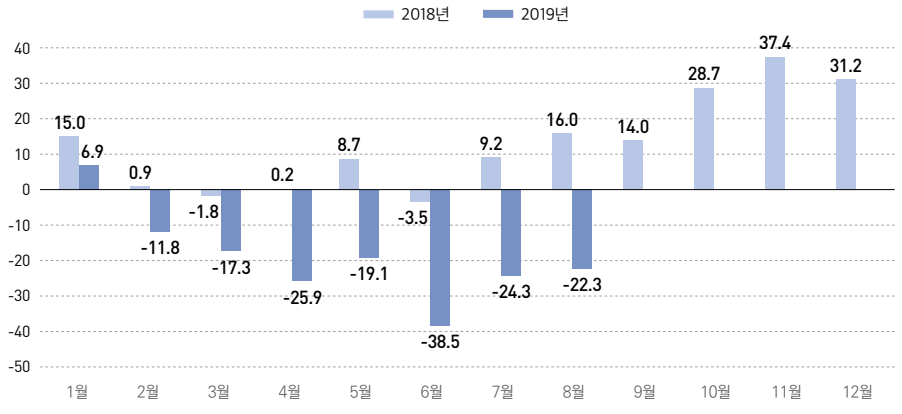
2019년 8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2.3조 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27.2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5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8.3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37.5조 원 악화되었으나, 이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5]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기인한다.

4 재정집행관리 점검 대상인 45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된다.

5 2019년 추경예산 5.8조 원 중 2.5조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43.4%이다.

통합재정수지
22.3조 원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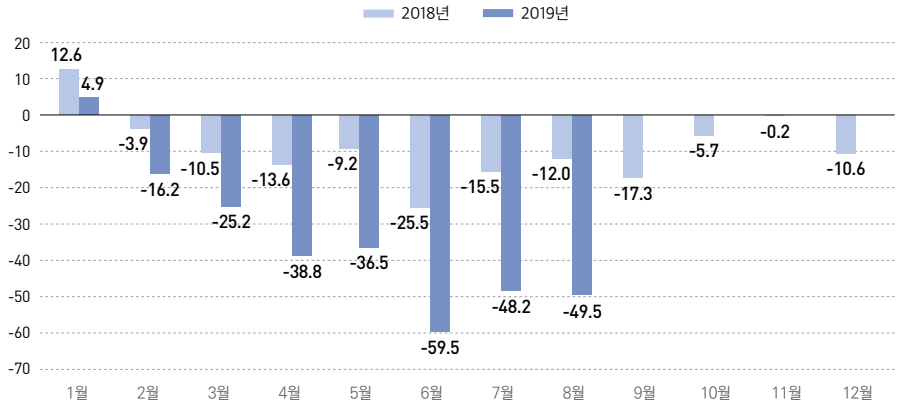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관리재정수지
49.5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중앙정부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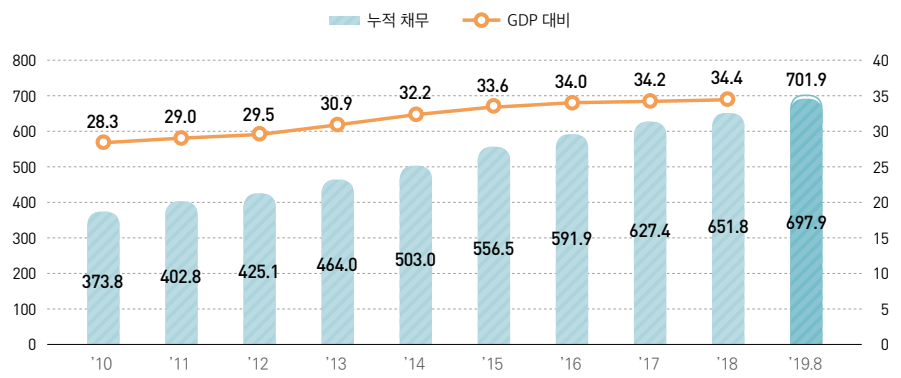
2019년 추경예산 상 중앙정부 채무[6]는 701.9조 원이며, 8월 말 현재 697.9조 원이다. 이는 국고채권 잔액 증가(5.1조 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0.3조 원) 등에 따라 전월 대비 5.7조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 결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대비 46.1조 원 증가하였다.

6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되며,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한다(2018년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680.7조 원으로 지방정부 채무(잠정치) 28.9조 원이 반영됨).

중앙정부 채무
697.9조 원

중앙정부 채무 추이(누계 기준)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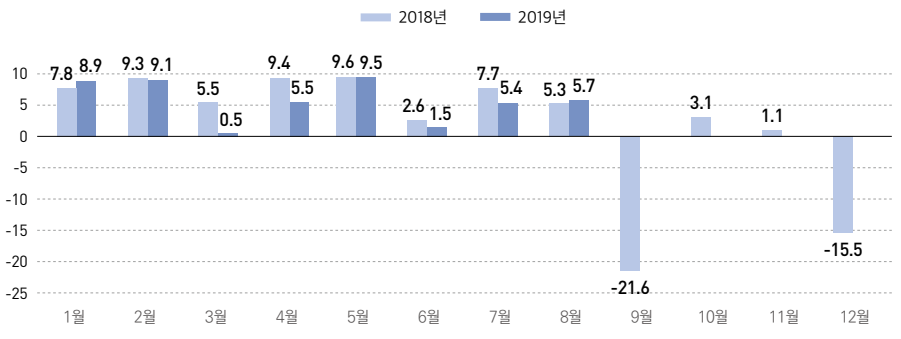


주 1) 2019년은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규모를 나타냄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 → 2015년 기준년 개편, '19.6.4.)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순차입 전월 대비
5.7조 원

중앙정부 채무 순차입 추이

(단위: 조 원)



주: 순차입이란 특정 기간 내에 국고채 발행 또는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증가 규모에서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감소 규모를 제외한 잔액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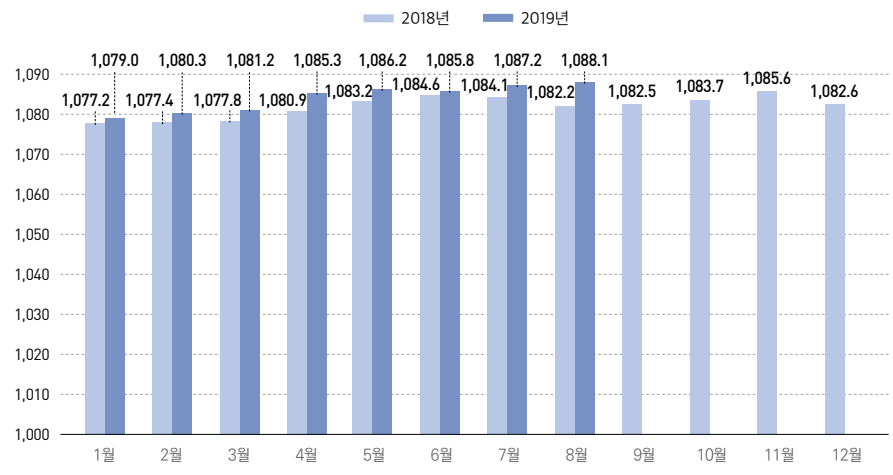
국유재산

2019년 8월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1,088.1조 원으로 전월 대비 0.9조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7] 814.1조 원(전월 대비 1.5조 원 증가), 일반재산[8] 274.0조 원(전월 대비 0.5조 원 감소)으로 구성된다.

7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청·관사, 도로, 하천 등이 이에 해당된다.
8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국유재산 현액
1,088.1 조 원

국유재산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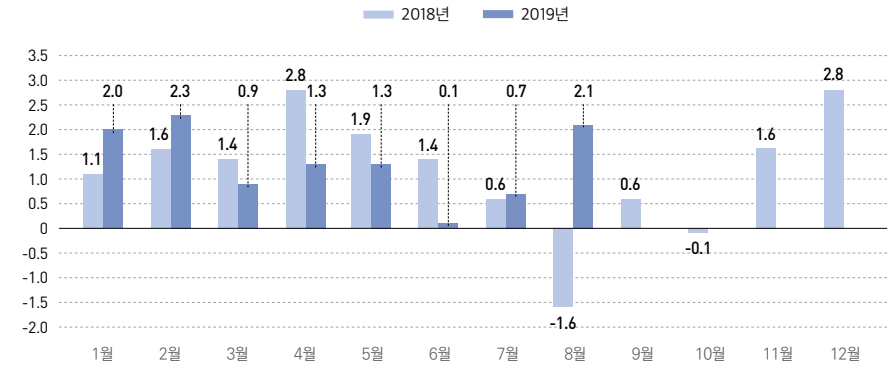


주 1) 2018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8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조 4,094억 원이며 전월 대비 6,721억 원 증가했다. 처분 총액은 2,866억 원으로 전월 대비 7,218억 원 감소하였으며, 8월 중 취득 총액이 처분 총액을 2조 1,228억 원 초과한다.

국유재산 순취득 총액
2.1 조 원

국유재산 순취득(취득·처분)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18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3) 순취득이란 매입, 교환 및 환지, 신규등록 및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에서 매각, 교환 및 환지, 멸실 및 양여로 인한 처분을 제외한 규모를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2. 분야별 통계: 국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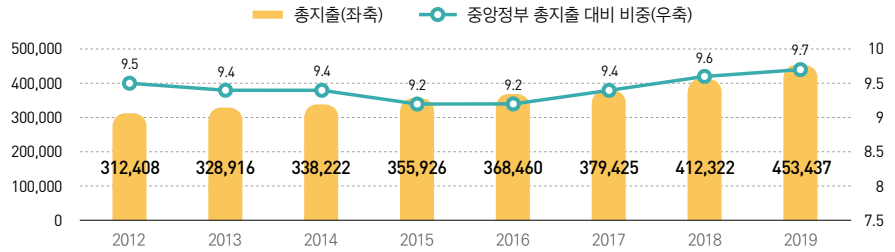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15대 분야(예비비 제외) 중 국방 분야의 재정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구조와 추이

2019년 국방 분야의 총지출은 45조 3,437억 원[1](총지출 대비 9.7%)으로 2018년(41조 2,322억 원) 대비 4조 1,115억 원(전년대비 10%)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 분야 총지출대비 비중은 약 평균 9.4% 수준이다.

국방 분야
45.3조 원

국방 분야 추이 (단위: 억 원, %)



주: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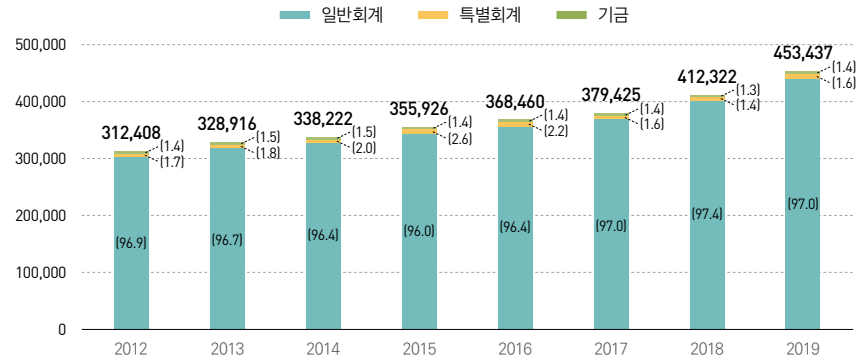
2019년 본예산 기준 국방 분야는 일반회계 43조 9,797억 원(국방 분야 총지출 대비 97.0%), 특별회계 7,150억 원(1.6%), 기금 6,520억 원(1.4%)으로 편성되었다. 국방 분야 일반회계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부사관, 장교, 병 등의 병력운영(15조 8,353억 원, 국방 분야 일반회계의 36.0%)과 항공기, 함선 등의 성능개량 및 전력운영을 위한 방위력개선 부문(15조 3,651억 원, 국방 분야 일반회계의 34.9%), 그리고 전력유지 부문(12조 5,479억 원, 국방 분야 일반회계의 28.5%)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 분야 특별회계는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편성되었고, 기금은 군인복지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44조 원

특별회계
0.7조 원

기금
0.7조 원

국방 분야 회계·기금별 현황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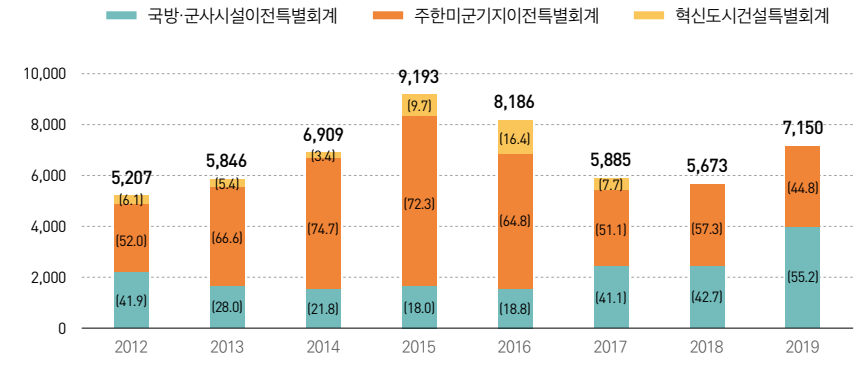
주 1)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농림·수산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 기준 국방 분야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7,150억 원이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와(3,945억 원, 특별회계 합계 대비 55.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3,205억 원, 44.8%)로 편성되어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0.4조 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0.3조 원

국방 분야 특별회계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국방 분야 특별회계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의 12대 분야 기준 국방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 규모이며, 병무청(2,283억 원)과 기획재정부(국유재산관리기금 48억 원) 등이 포함된 16대 분야 기준 국방 분야와는 그 규모가 상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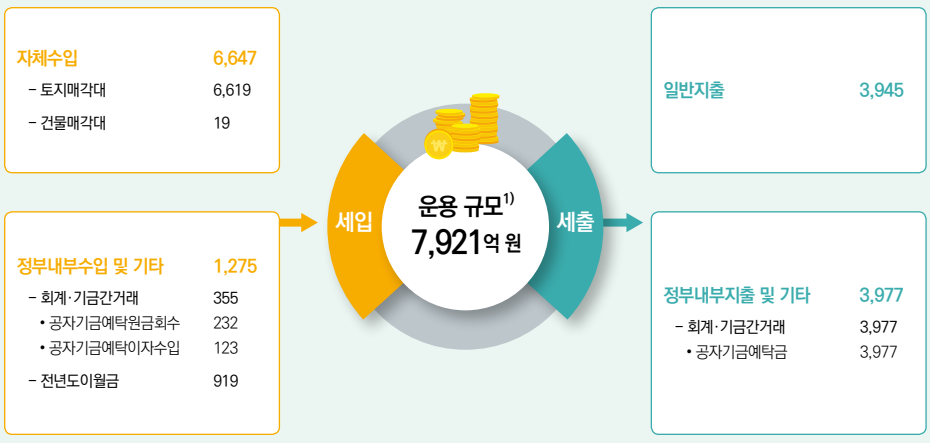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공유재산의 매수·보상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에 근거해 2007년 설치되었다. 주요수입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처분대금, 위약금, 연체료, 국방·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 대금[2],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기타 차입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 건설경비, 군관사 매입비용과 군이 점유중인 사유·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3], 주변 지역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한다.

2019년 운용규모는 7,921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6,647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275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일반지출 3,945억 원,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3,977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운용 규모
0.8조 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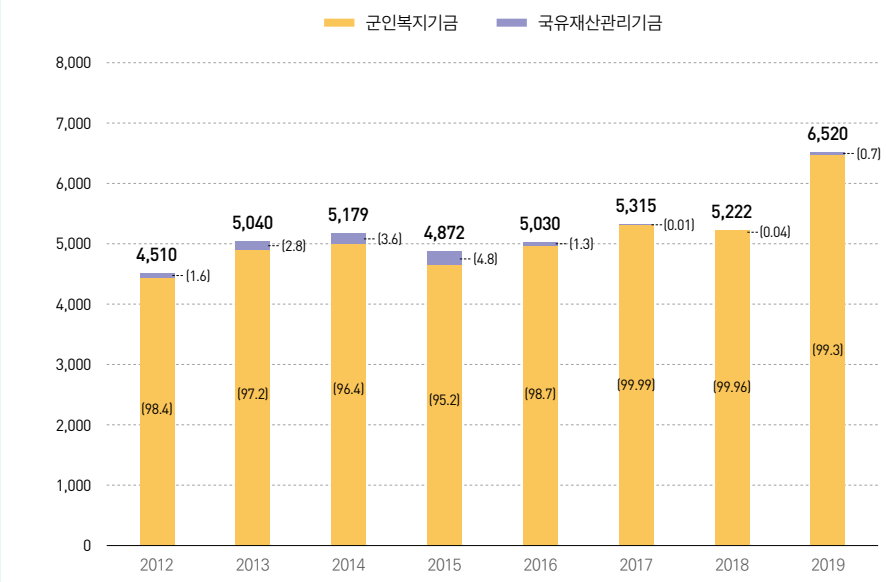
2019년 본예산 기준 국방 분야 기금의 편성 규모는 6,520억 원이다. 그 중 군인복지기금이 6,472억 원으로(국방 분야 기금 총합계 대비 99.3%) 국방 분야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이 48억 원(국방 분야 기금 총합계 대비 0.7%) 규모로 소폭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군인복지기금
0.6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48억 원

국방 분야 기금 운용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국방 분야 기금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군인복지기금은 효율적인 군의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근거하여 1996년 설치되었다. 정부의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금, 사용허가를 통해 받은 사용료,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수익, 주거지원 관련 입주보증금, 관사퇴거지연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주요 지출로는 복지시설 유지 및 관리, 신설 및 증설,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입주보증금 반환 등에 지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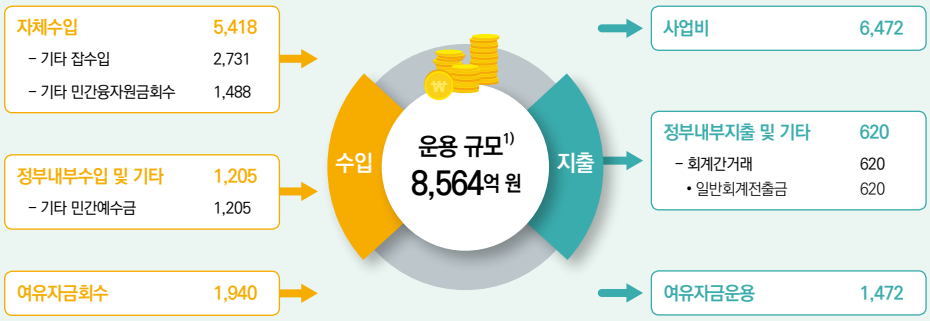
2019년 운용규모는 8,564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5,418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205억 원, 여유자금회수 1,940억 원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사업비 6,472억 원,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620억 원, 여유자금운용 1,472억 원으로 구성된다.

2 200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대금
3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군인복지기금 운용 규모
0.8조 원

군인복지기금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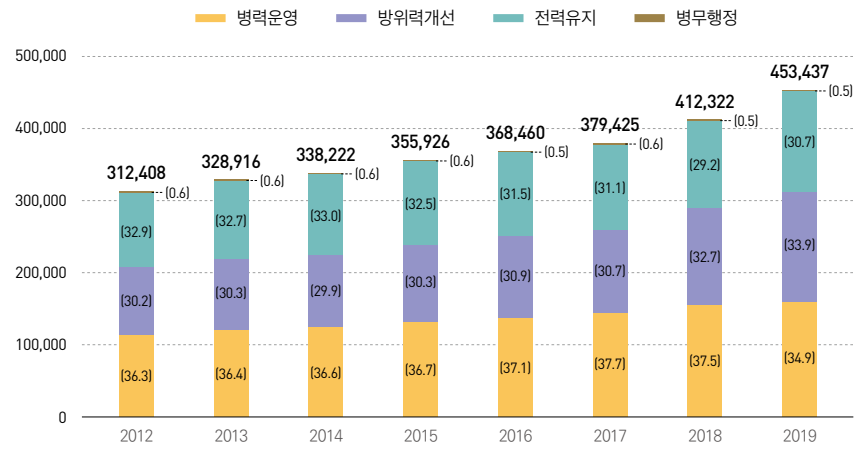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기준 국방 분야는 병력운영, 방위력개선, 전력유지, 병무행정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병력운영 부문으로 34.9%(15조 8,353억 원)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방위력개선 부문 33.9%(15조 3,651억 원), 전력유지 부문 30.7%(13조 9,101억 원), 병무행정 부문 0.5%(2,332억 원)로 편성되어 있다.

병력운영
15.8조 원
방위력개선
15.4조 원
전력유지
13.9조 원
병무행정
0.2조 원

국방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국방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2)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방 분야 사업 주요사업은 규모가 큰 인건비[4]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F-35A 사업, 육군부대개편 2차 사업, 평택기지이전 사업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장애물개척전차 사업이 편성되었다.

F-35A 사업
1.5조 원

F-35A 사업(일반회계, 1조 5,562억 원)은 방위사업청이 시행하는 공군 전력강화 사업이다. F-35A전투기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전투기로, 2019년 전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5]하여 2021년까지 총 40대가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육군부대개편 2차 사업
0.1조 원

육군부대개편 2차 사업(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358억 원)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미래 부대구조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2017년 착수한 사업이다.

평택기지이전 사업
0.2조 원

평택기지이전 사업(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525억 원)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과 국토 균형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과 대구 2개의 허브기지로 통폐합하는 사업이다.

장애물개척전차 사업
202억 원

장애물개척전차 사업(일반회계, 202억 원)은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사업목적은 효율적인 장애물 제거를 통해 기동부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민통선 지역과 같이 미확인 지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지역 내 장병 및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K1A1전차 플랫폼에 지뢰제거쟁기, 굴삭팔 등을 장착해 지뢰와 낙석 등 다양한 장애물을 개척할 수 있는 기동지원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4 2019년 국방 분야 인건비는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병력운영부문 인건비 사업(부사관 인건비(5조 4,788억 원), 장교 인건비(4조 3,271억 원), 군무원 인건비(1조 342억 원), 병 인건비(1조 6,920억 원))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전력유지부문 인건비(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3,780억 원), 국방홍보원 인건비(113억 원), 국방전산정보원 인건비(26억 원)) 마지막으로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부문 인건비(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2,614억 원),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477억 원))로 편성되어있다.

5 공군은 지난 2019년 3월 29일 F-35A 전투기 2대를 인수하였다.

이 달 의 이 슈 키 워 드
「병역」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병역'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면제', '기피', '국적'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유명인 또는 그 자녀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따른 병역 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kr)

연관어

- 병무청
- 국적
- 면제
- 원정출산
- 국가유공자
- 연기
- 기피
- 부담
- 귀화
- 선수
- 이중국적
- 시민권
- 출국
- 아들
- 후보자

주: '병역'이 포함되어 검색된 결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19.9.20.), 수집기간: 2019.8.1.~8.31.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8%는 우리나라 병의 군 생활 여건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95.2%, 연령별로 보면 50-59세가 97.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병의 군 생활 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

(단위: 명, %)

			나아졌다	나아지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2]	계
	계	1,006	92.8	3.8	3.4	100.0
	남자	499	95.2	3.4	1.4	100.0
	여자	507	90.4	4.2	5.3	100.0
	19-29세	176	83.1	9.4	7.4	100.0
	30-39세	176	89.2	5.0	5.8	100.0
	40-49세	206	94.7	3.9	1.4	100.0
	50-59세	200	97.5	1.9	0.5	100.0
	60세 이상	249	96.8	0.4	2.8	100.0

주 1) 조사기간: 2017.10.13.~11.1.
2) 무응답 포함
자료: 국방부, 「2018 국방통계연보」

이에 반해, 우리나라 현역자원의 입영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영비율은 2014년 100.9%를 기점으로 2017년에는 92.5%까지 낮아졌다. 특히, 2017년 현역 입영대상자는 281,222명으로 2016년 대비 8.3% 감소하였으나, 입영 연기자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입영한 인원은 227,115명으로 2,016명 대비 15.0% 감소하며, 입영비율은 5.9%p 감소하였다.

현역병 입영 현황

(단위: 명, %)

	2013	2014	2015	2016	2017
현역자원	329,751	333,227	328,974	304,473	281,222
계획인원(A)	257,923	271,836	250,193	265,351	245,469
입영인원(B)	256,171	274,292	249,477	261,203	227,115
입영비율(B/A)	99.3	100.9	99.7	98.4	92.5

주: 현역자원 – 전년도 기준 병역판정 결과 현역 입영대상자
계획인원 – 금년도 기준 군에서 충원을 필요로 하는 현역 인원
입영인원 – 금년도 군부대에 들어간 인원(상근예비역 포함)
자료: 국방부, 「2018 국방통계연보」

정부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 복지정책의 기본 지침인 「군인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제초·제설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사역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상이군인에게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을 인상하는 등 병영문화 개선과 장병의 복지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병영 생활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보장하기 위한 병 봉급도 인상할 계획이다. 2018년 기준 병장 봉급은 연 4,868,400원으로[1] 급식비, 피복비 등을 포함한 병장 1인당 인력운영비는 837백만 원이지만, 2022년까지 병장 봉급은 월 676,100원까지 인상하고, 개인천막 보급, 민간조리원 확대(50명 이상 취사장에 1명) 등의 급식 및 피복비 등도 인상할 계획이다.

병사 1인당 인력운영비 (단위: 천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봉급	병장	4,780.8	5,233.2	5,622.0	5,863.2	8,368.8
	상병	4,608.0	5,034.0	5,392.8	5,611.2	7,894.8
	일병	4,453.2	4,856.4	5,188.8	5,388.0	7,476.0
	이병	4,342.8	4,729.2	5,042.4	5,227.2	7,173.6
	병장	1,788.0	2,056.8	2,365.2	2,592.0	4,868.4
	상병	1,615.2	1,857.6	2,136.0	2,340.0	4,394.4
	일병	1,460.4	1,680.0	1,932.0	2,116.8	3,975.6
	이병	1,350.0	1,552.8	1,785.6	1,956.0	3,683.2
급식비		2,365.2	2,505.6	2,555.8	2,553.6	2,731.2
피복비		627.6	670.8	701.0	717.6	769.2

자료: 국방부, 「2018 국방통계연보」

2020년도 군 복지향상 관련 주요사업

정부는 병역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원하고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맞춤형 복무여건으로 생산적 병영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 정부 예산안에 33조 4,612억 원(전력운영비 기준)을 반영하였다.

장병의 의·식·주 전반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장병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할 계획이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하루 급식단가를 8,493원으로 2019년 8,012원 대비 481원 인상할 계획이며(기본급식 사업, 1조 6,404억 원), 격오지 등 소규모부대 현지 부식구

1 2020년 정부 예산안 기준 병장 봉급은 월 541,000원으로, '병 인건비'(총지출 기준)는 2조 965억 원으로 반영되었다.

매 등 훈련 및 특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병의 체력보강 및 유지를 지원하고(중/특식 사업, 1,277억 원), 현재 80명당 1명 수준인 민간조리원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민간조리원운영 사업, 576억 원). 또한, 열악하고 노후한 소대 단위(30명~50명)의 침상형 생활관을 분대 단위(8~10명)의 침대형 구조로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으며(병영생활관 사업, 1,213억 원), HACCP형 취사식당 등의 병영 생활 필수시설을 신축 및 개·보수하거나(병영생활 부속시설 사업, 2,391억 원), 내구성·활동성을 개선한 전투복·전투화를 보급하고 있다(기본피복 사업, 3,632억 원).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상이군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장애보상금 사업, 142억 원).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애 발생 정도에 따라 최대 기준소득월액[2]의 7.8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외국어 학습, 군 직무 분야 관련 국가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자기계발교육 사업, 233억 원). 병과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학점은행제를 인정하고, 도서구입 및 어학·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2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41.9%보다 작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17년 기준 508만 원)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한다.

영국의 재정위험 전망 :
英 예산책임청 발간, 「재정위험보고서」

영국 의회는 2015년 10월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개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충격 및 위험요인을 측정하는 보고서를 최소 2년 간격으로 작성하도록 예산책임청(OBR; Office Budget for Responsibility)[1]에게 권고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예산책임청은 2017년 7월 「재정위험보고서(Fiscal Risk Report)」를 처음으로 발간하고, 2년 만인 2019년 7월에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의 「재정위험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과 브렉시트 발생에 따른 영국의 재정전망을 간략히 소개한다.

김도일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doylek@kpfis.kr)

영국의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

「재정위험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8가지 부문(거시경제, 금융, 수입, 지출, 재무상태표, 정부부채 이자지급, 재정정책, 기후변화)에 걸쳐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전망부터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요인을 새롭게 분석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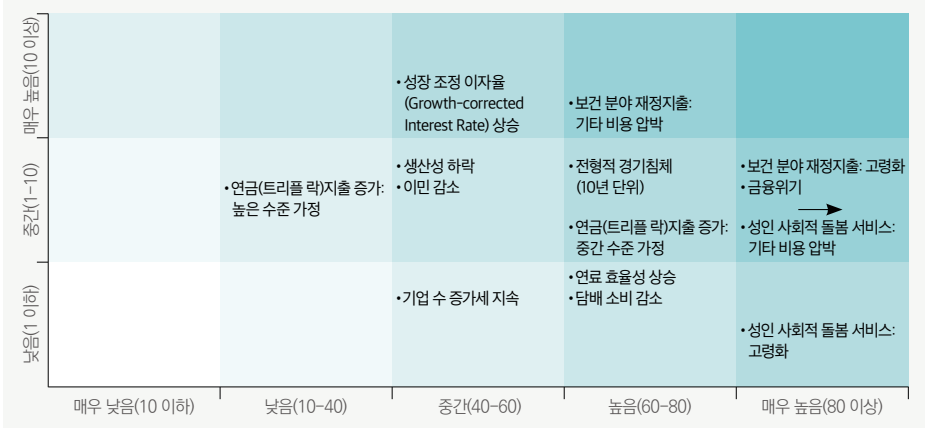
분석에 따르면, 중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재정위험 요인들의 발생 가능성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류세(Fuel Duty) 유지 결정은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 측면의 높은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재정정책'과 관련된 위험도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회계연도 2020-21까지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PSNB; Public Sector Net Borrowing)을 GDP 대비 2% 이내로 축소하는 등과 같은 현재의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완화적으로 수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채 감축, 회계연도 2025-26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등과 같은 재정적 목표들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재정정책 부문에서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가능성, 생산 갭(Output Gap) 예측의 불확실성, 조세 경감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은 2017년 이후 새롭게 추가된 재정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재정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이 중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실제 발생하는 경우 미치는 영향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 고령화, 의료비용 상승 등 비용 압박에 따른 보건·사회보장 분야의 재정지출 증가[2], 영국 기초연금제도에 적용되는 트리플 락(Triple Lock)[3] 유지 결정 등은 '지출' 부문에서 장기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융' 부문 위험요인은 발생 가능성이 중기적으로는 10~40%로 낮지만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4]의 빠른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하여 장기적으로는 90%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감독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그림자금융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들의 구제금융, 소매투자자 보상 등 재정소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도 생산성 하락, 이민 감소, 담배 소비감소 따른 세수기반 축소 등도 장기적인 재정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장기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요인

(단위: GDP 대비 %, %)



주 1) 횡축은 위험의 발생가능 확률을, 종축은 공공부문 순부채에 장기적(2068-69년)으로 미치는 영향을 의미
2) 화살표는 2017년 분석 대비 변화를 의미

자료: OBR, 「Fiscal Risk Report」, 2019.7.

---

1 예산책임청(OBR; Office Budget for Responsibility)은 영국 재정에 대한 독립적이고 권위적인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독립재정기구이다.

2 영국의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Adult Social Care)는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돌봄, 여가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하다.

3 영국 기초연금제도에 적용되는 트리플 락(Triple Lock)은 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고정금리 2.5% 중 가장 높은 것을 채택하여 연금액을 인상시키는 연금수급자 보호 정책이다.

4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아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 및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브렉시트에 따른 파급 영향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는 이민자 문제, 과도한 재정분담금에 비해 EU 내 영국의 낮은 지위 등으로 영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찬성 가결되었고, 영국 정부가 2017년 3월 29일 EU에 탈퇴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리스본 조약」 제50조[5]에 따라 브렉시트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2019년 10월 말인 브렉시트의 최종 결정시한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EU뿐만 아니라 영국 내부적으로도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영국이 EU와의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탈퇴하게 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재정위험보고서」는 10장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되는 경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검정(Stress Test)을 통해 측정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3월 발표한 「경제 및 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의 기준선 전망과 비교한 수치로써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 비용을 의미한다. 본 분석은 향후 미래에 대한 예측(Forecast)이기보다 브렉시트 발생 시 재정이 반응하는 채널을 탐색하는 시나리오(Scenario)로써 더욱 의미가 있다.

본 분석은 IMF가 지난 4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사용한 가정[6]에 기초하고 있는데 무역비용, 이민정책, 금융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먼저 노딜 브렉시트가 이행되는 경우 영국은 EU와 역내 교역에서 누리던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신 WTO의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able Nation)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관세가 증가하는 등 무역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민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영국으로의 순 이민자 유입은 2030년까지 25,000명 줄어들고, 금융시장은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등 여건이 악화될 예정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재량적 재정정책은 제한적일 것이나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sers)[7]가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화정책의 경우 수요 진작을 위한 통화당국의 기준금리(Bank Rate) 인하 등으로 완화적 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서는 파운드화 가치 절하, 주가 하락, 국내총생산 축소, 기업투자 저하, 고용 및 생산성 악화 등 금융·노동·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장기적 경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5 「리스본조약」 제50조의 1항은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헌법규정에 따라 EU탈퇴 결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2-5항에서는 구체적인 탈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6 IMF의 가정 중 국경 붕괴(Border Disruption)가 없고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신용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낮은 "완화된 시나리오(Less Disruptive Scenario)"를 차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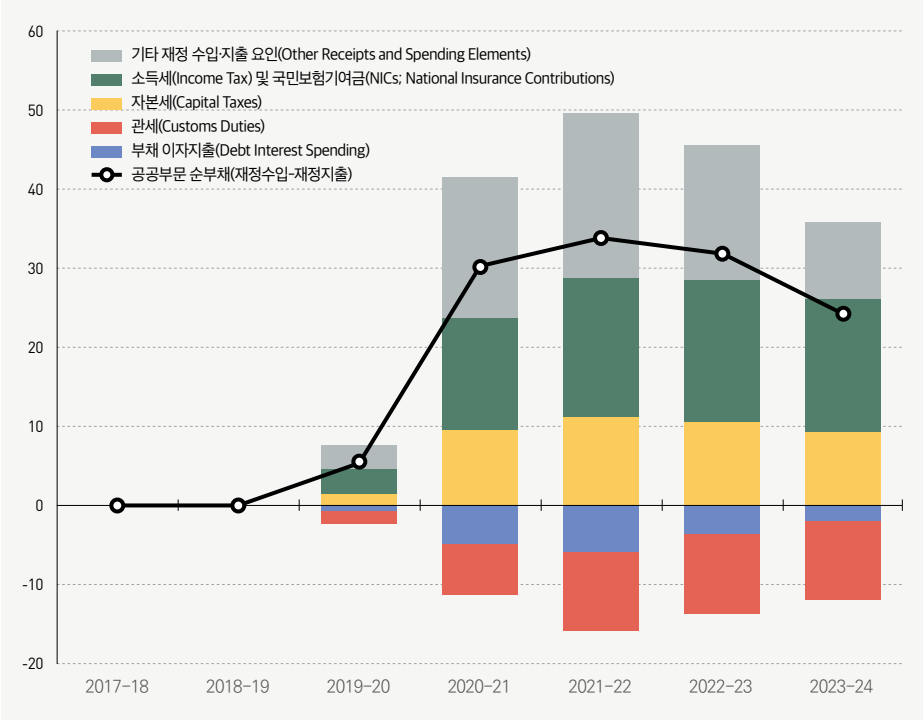
7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sers)는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변화 없이도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변동하여 경기 하락 또는 상승 시 경기변동성을 줄여주는 재정정책 요소를 말한다.

위 가정에 기반한 스트레스 검정 결과, 2020-21년 공공부문 순부채는 3월 기준선 전망보다 300파운드 증가해 노딜 브렉시트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① 소득세 및 국민보험기여금(NICs;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수입 감소, ② 자본세(Capital Taxes) 수입 감소, ③ 부채 이자지출 축소, ④ 관세 인상 등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그림 2〉. 구체적으로는 경기순환적 침체로 인해 소득세 및 국민보험기여금 수입이 타격을 받으면서 순부채는 2020-21년 이후 연간 165억 파운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 하락은 자본세 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치며 동기간 순부채는 연간 100억 파운드 증가할 예정이다. 다만 낮은 이자율과 소매물가(PRI)로 인한 부채 이자지출 규모 축소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 등은 재정수입의 감소 효과를 일부 상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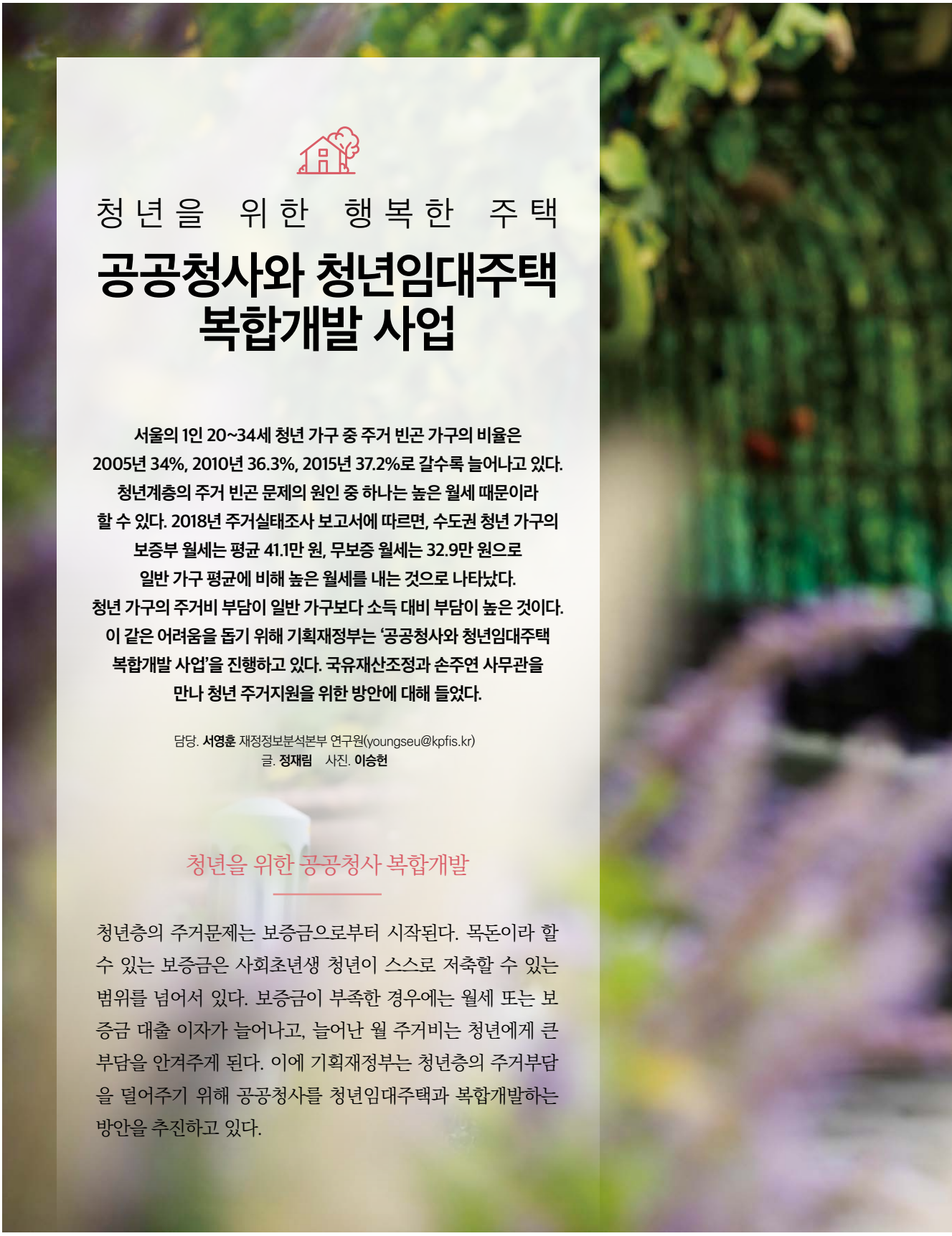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2020-21년까지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을 GDP 대비 2% 이내로 축소하려는 재정건전화목표(Fiscal Mandate)는 근소한 차이로의 달성이 가능하겠으나, 부채 감축, 2020년대 중반까지 균형재정 달성과 같은 기타 재정적 목표는 더욱 달성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림 2. 노딜 브렉시트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검정결과와 3월 경제전망 비교 : 공공부문 순부채(PSNB)

(단위: 억 파운드)



자료: OBR, 「Fiscal Risk Report」, 2019.7.



청년을 위한 행복한 주택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

서울의 1인 20~34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년계층의 주거 빈곤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월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 가구의 보증부 월세는 평균 41.1만 원, 무보증 월세는 32.9만 원으로 일반 가구 평균에 비해 높은 월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일반 가구보다 소득 대비 부담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유재산조정과 손주연 사무관을 만나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들었다.

담당.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kr)
글. **정재림** 사진. **이승헌**

청년을 위한 공공청사 복합개발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보증금으로부터 시작된다. 목돈이라 할 수 있는 보증금은 사회초년생 청년이 스스로 저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월세 또는 보증금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늘어난 월 주거비는 청년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청사를 청년임대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nterview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손 주 연

사무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가 담당하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국유재산 개발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건축개발 분야는 청사 및 수익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여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 국유재산의 정책 방향을 재정수입 확보와 공공성의 조화로 전환하고 청사와 청년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손주연 사무관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개발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청사를 공공청사와 민간 업무·상업·주거시설로 복합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공공택지의 일부를 활용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직장이나 학교가 위치한 도심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곳에 공급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요. 도심 지역 내에 위치한 오래된 청사 건물 등을 재건축하면서 청년임대주택을 복합하면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청사 복합개발 확대 사업은 지난 7월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희망사다리 대책은 일자리·주거·교육·취약 등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으로서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그중 주거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되었다.

2017년에는 도심 노후청사를 청년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하는 선도사업지 8곳(영등포선관위, 남양주복합청사, 광주동구선관위 등)을 선정한 데 이어, 옛 선거연수원, 관악등기소 등의 신규 사업후보지 5곳을 추가로 발굴했다.

"국유지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이라 국유재산 데이터를 활용해 우선 30년 이상의 노후청사가 있는 곳

후보지		위치	사업유형	
1	옛 선거연수원	서울 종로구 인의동(종로5가역)	청사 + 상업 + 청년임대주택	50호
2	옛 관악등기소	서울 관악구 남현동(사당역)		50호
3	안양세관(신축)	경기 군포시 금정동(산본역)		50호
4	대방 군관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대방역)	군관사 + 신혼희망타운	150호
5	공릉 군관사	서울 노원구 공릉동(화랑대역)		175호

으로 대상지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구 3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을 권역별로 가려냈고, 수요가 충분한 지역인지 또 사업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살폈습니다. 청사의 특수성으로 주거와 복합으로 짓기 어려운 곳을 제외해야 했지요."

이렇게 선정된 추가 사업후보지 5곳은 청년임대주택과 신혼부부에게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형태의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올해 안으로 후보지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2023~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양적인 공급보다는 필요한 곳에 지원

수도권 내 교통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후보지를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후보지를 계속 발굴해나가고 있지만, 국유지 청사가 있는 부지에 특수시설을 제외하면 양적으로 많은 주거지 공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청사가 노후되어 재건축을 하게 되면 30~40년 전에 비해 청사 근무 정원도 많이 늘어나 기존청사보다 규모가 커져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3~4층이던 청사가 재건축을 하면 7~8층 규모가 되어 청년임대주택을 복합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도시 건축 시 공급하는 것처럼 많은 세대를 충족하기는 힘들지요."

하여 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양적인 공급에 치중하기보다 필요한 위치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국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질적인 정책 목표에 다가가려고 노력했다고.

"청년임대주택을 개발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생활비 중 주거비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직장 또는 대학 인근, 혹은 대중교통 접근이 편리한 지역에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기는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보다 공급되는 주택 수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확대에 앞서 교통접근성이 좋고 꼭 필요한 곳에 사업후보지를 발굴하는 것을 우선하여 질적인 정책 목표에 다가가려고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신규 후보지 발굴부터 건축 사업 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완공되어 운영되는 단계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양적인 확대에 앞서 **교통접근성이 좋고 꼭 필요한 곳에 사업후보지를 발굴하는 것을 우선**하여 **질적인 정책 목표**에 다가가려고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요?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kr)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재정당국과 국민의 대표가 만들어 낸 국가예산이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가능하면 국민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중 하나가 「국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이다 보니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아직 생소한 「국민참여예산제도[1]」가 무엇인지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 시에서 방만한 시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알레그레 사례는 시민참여의 성공모델로 평가받았고, 상파울루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브라질을 넘어서 미국, 스페인, 독일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광주시 북구청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2011년 「지방재정법」개정[2]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아이디어 공모나 정책고객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과거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운영되던 제도와 비슷하지만 국가(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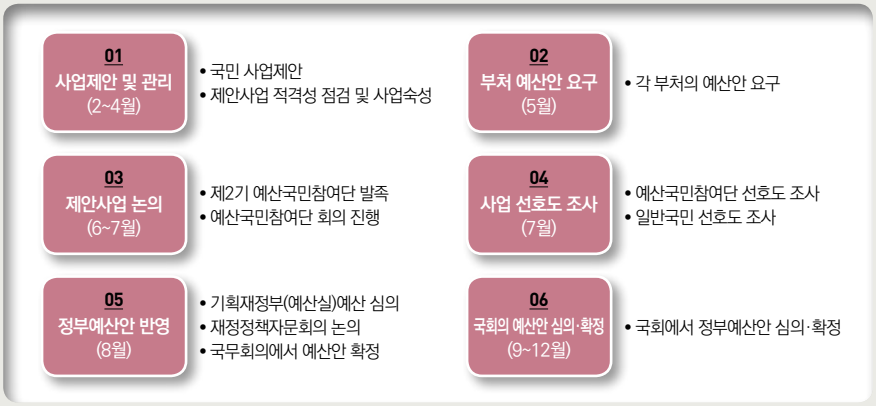
예산의 편성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의 검토 및 숙성과정을 통해 예산사업으로 구체화합니다. 이후 국민참여단이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논의하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우선사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더해 최종 순위를 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후 국회에서 심의·확정이 되면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1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항 -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 - 정부는 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참여예산 절차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6개 사업에 422억 원이 반영된 이후 2019년 예산에는 1,206건의 국민제안 중 102건이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다시 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39개 사업 835억 원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38개 사업 92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이 전체 70%를 차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지원, 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지급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6개 사업, 2,694억 원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3]하였습니다. 임산부에게 임신 시부터 출산 이후까지 1년간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올해 예산에 포함됐던 미세먼지 대책 사업은 기존보다 증가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은 정부가 편성하는 국가예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제 막 첫발을 뗀 제도이니만큼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끝까지 잘 집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 **운영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 **홈페이지 주소 : www.mybudget.go.kr**
○ **서비스대상 : 일반국민, 중앙부처 예산담당자**
○ **주요기능**
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통해 국민의 사업제안 접수, 심사, 우선순위 결정, 피드백 및 국민 제안사업 선호도 조사 등 제도운영 전반의 온라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② 국민대표인 예산국민참여단의 분과별 토론, 질의응답 등 온라인 소통기능과 참여단 재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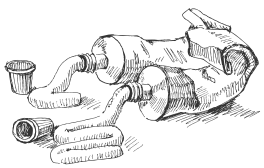
3 (전년도 사업 계속반영) 38개 중 28개 사업, 1,580억 원 (신규반영) 38개 사업, 1,114억 원을 반영하였다.

명품에 대한 욕망이 세계 최대의 국가를 만들다

글. **송병건** 성균관대학교 교수(bks21@skku.edu)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전성기를 이끈 렘브란트의 작품 「니콜라스 뤼츠의 초상」을 보자. 주인공은 화려한 모피 의상을 한 중년 남자다. 값비싼 담비 털을 댄 망토를 차려입고 있다. 당당하면서도 주의력 깊은 표정과 시선이 돋보인다. 하지만 보통 초상화를 많이 그리는 귀족이나 학자라고 보기에는 덜 세련된 인상에다 얼굴에 주름이 깊고 손이 두텁다. 이 인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그림의 주인공 뤼츠는 러시아에서 모피 사업을 하는 인물로, 그다지 부유한 상인은 아니었다고 한다. 렘브란트는 의뢰인이 내심 원했을 이미지대로 초상화를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의뢰인의 옷이 아니라 의뢰인이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유했던 최고급 모피 의상을 의뢰인에게 입혀 이 작품을 탄생시켰다.



렘브란트는 실로 부르주아 초상화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에 어울릴만한 화가였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중상주의 시대에 네덜란드는 물론 여러 유럽 국가에서 수많은 모피 수입상이 활동했다는 점이다. 중세 내내 모피 옷은 왕족과 귀족이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명품이었다, 특정한 모피는 최상 신분층만 사용할 수 있다는 명령이 공포되기도 했고,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모피 종류를 지정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16세기 이후 부를 축적한 신흥 부르주아들이 신분을 사들이고 고위직에 임명되기도 하였는데, 이때부터 모피는 중산층에게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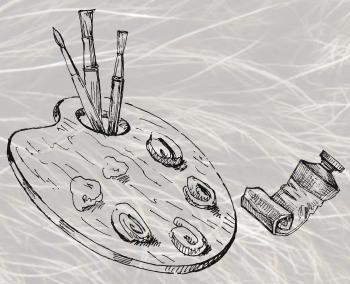
모피에 대한 인기는 모피의 최대 공급처인 러시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 각지가 교역을 통해 단일한 네트워크로 통합되어가던 16세기에, 유라시아 면적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시베리아에서는 여러 부족이 세계화의 흐름과 단절된 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수렵과 채집, 순록 사육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시베리아의 서쪽에 자리 잡은 러시아에서는 1547년 이반 뇌제가 자신을 차르라 칭하고 즉위해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제국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1580년대 초 대부호인 스트로가노프 가문은 이반 뇌제에게 시베리아에서 민관 합동으로 모피무역을 하자고 제안했다. 재정 확충이 절실했던 차르가 이를 받아들이자 스트로가노프가는 러시아 남방지역으로부터 싸움에 능한 카자크(코사크)를 대거 고용해 시베리아 정복 작전을 시작했다.

렘브란트, 「니콜라스 뤼츠의 초상」, 1631년.

바실리 수리코프의 「예르막의 시베리아 정복」은 카자크 부대가 시베리아에서 시비르 한국(汗國)의 부대와 전투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총포로 무장한 카자크 부대가 재래식 무기를 든 상대방을 압도하는 장면이다. 화가 바실리 수리코프(Vasili Surikov)는 러시아 정교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용맹스런 부대원들이 이슬람 세력을 제압하는 모습을 장엄하게 묘사하였다. 화가는 이 전투를 문명과 야만, 혹은 근대와 전근대의 대결처럼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후 카자크 부대는 시베리아 전역을 차례로 정복해 갔다. 그들에게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병력과 무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인들과 달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었다. 1세기 전에 아메리카 인디오들

바실리 수리코프, 「예르막의 시베리아 정복」, 1895년.



러시아의 통치 하에 이제 시베리아 인들은 모피를 러시아 왕실에 바치고 대신에 담배, 도끼, 칼 등을 하사받았다. 17세기에 매년 20만 장 이상의 모피가 공납되었다. 러시아 세수의 10%에 육박하는 가치였다.

이 스페인 정복자들을 통해 들어온 천연두와 홍역 때문에 엄청난 사망률을 기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시베리아인들도 낯선 질병들에 노출되어 목숨을 잃었다. 이렇듯 학살과 질병으로 인구가 격감하거나 아예 절멸한 부족이 줄을 이었다.

동진(東進)은 계속되었다. 1640년대에 아무르강에 도달하였고, 1650년대에는 만주 헤이룽강 지역까지 진출하여 요새를 건설함으로써 청나라와 마찰을 빚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청의 요청에 따라 총수(銃手)들을 뽑아 나선(羅禪, Russia) 원정대를 파견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한편, 이미 1639년에 태평양 연안에까지 도달한 러시아의 정복부대는 동진을 계속해서 1740년대에 알래스카에 정착지를 마련하였고, 이어서 1810년에는 캘리포니아 북부까지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역사상 최초로 유럽-아시아-아메리카를 잇는 초대형 제국이 탄생했다.

광대한 시베리아를 손에 넣은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모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찾았다. 우선 모든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모피 공납을 의무화했다. 과거에도 시베리아인들은 야사크(Yasak)라고 불리는 공납제도에 익숙해 있었다. 유력한 집단에 공물을 바치고 대신에 하사품을 받는 형태였다. 러시아의 통치하에 이제 시베리아인들은 모피를 러시아 왕실에 바치고 대신에 담배, 도끼, 칼 등을 하사받았다. 17세기에 매년 20만 장 이상의 모피가 공납되었다. 러시아 세수의 10%에 육박하는 가치였다. 술과 담배처럼 중독성이 강한 물품을 시베리아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대신 모피를 얻는 방법도 널리 쓰였다. 이 역시 러시아 정복자들이 모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고안해 낸 방법이었다. 이런 공납과 교역을 통해 시베리아는 세계적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다. 강압적이고 잔인한 세계화 과정이었다.

알래스카의 사정도 시베리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1740년대부터 알래스카로 진출한 러시아 상인들은 원주민인 알류트족을 예속화하거나 교역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이들이 모피를 계속 공급하도록 만들었다. 학살과 예속화, 질병의 창궐도 익숙한 광경이었다. 러시아 상인들은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자 무역회사를 합병하여 규모를 키웠고, 그럴수록 알류트족은 더 깊고 험한 지역까지 들어가 모피 사냥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모피 공급처로서 알래스카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유럽까지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었다.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의 모피 자원을 공략하는 데에는 대서양을 건너 대륙의 동북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일찍부터 모피를 획득하기 위해 북아메리카에 발을 들여놓았고, 영국은 후발국이었지만 1668년 허드슨만을 차지함으로써 모피무역에 유리한 고지를 장악했다. 이런 서유럽 경쟁자들에 맞서기에 러시아의 회사들은 힘에 부쳤다. 알래스카를 둘러싼 러시아의 고민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러시아는 1854-56년 크림전쟁에서 영국·프랑스·터키와 싸웠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재정이 악화되고 군사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차르와 관리들은 드넓은 제국의 영토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낮은 부분은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알래스카에 유용한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해 보니 석탄 매장량은 적고, 고래잡이는 어렵고, 금 채굴도 신통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내륙 탐사를 통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피의 양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알래스카보다 자원개발 전망이 나아 보이는 시베리아의 아무르강 유역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차르 알렉산드르 2세는 시베리아를 인수할 대상국을 물색하다가 1867년 남부전쟁이 마무리된 미국을 대상으로 판매협상을 벌였다. 같은 해 3월 30일, 마침내 러시아와 미국은 역사적 조약을 체결했다. 「알래스카의 매입 서명」은 이매누엘 로이체(Emanuel Leutze)가 묘사한 조약 체결 장면이다. 커다란 지구본을 사이에 두고 왼편의 네 미국 대표와 오른편의 세 러시아 대표가 교섭을 하고 있다. 조약의 핵심은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미국에 매각한다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이 땅이 훗날 금, 석유, 천연가스가 가득한 자원의 보고로 판명될 것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1 에이커(약 4천 m^2)에 불과 2센트라는 헐값에 이 땅을 넘기고 말았다. 모피에서 시작된 러시아의 영토 확장은 여기서 마무리되었다. 결정적 오판으로 인해 러시아는 세 대륙을 잇는 유일한 영토대국이 될 기회를 영영 잃고 만 것이다.

* 이 글은 『비주얼 경제사』(2015)에 실린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 **이매누얼 로이체, 「알래스카의 매입 서명」**, 1868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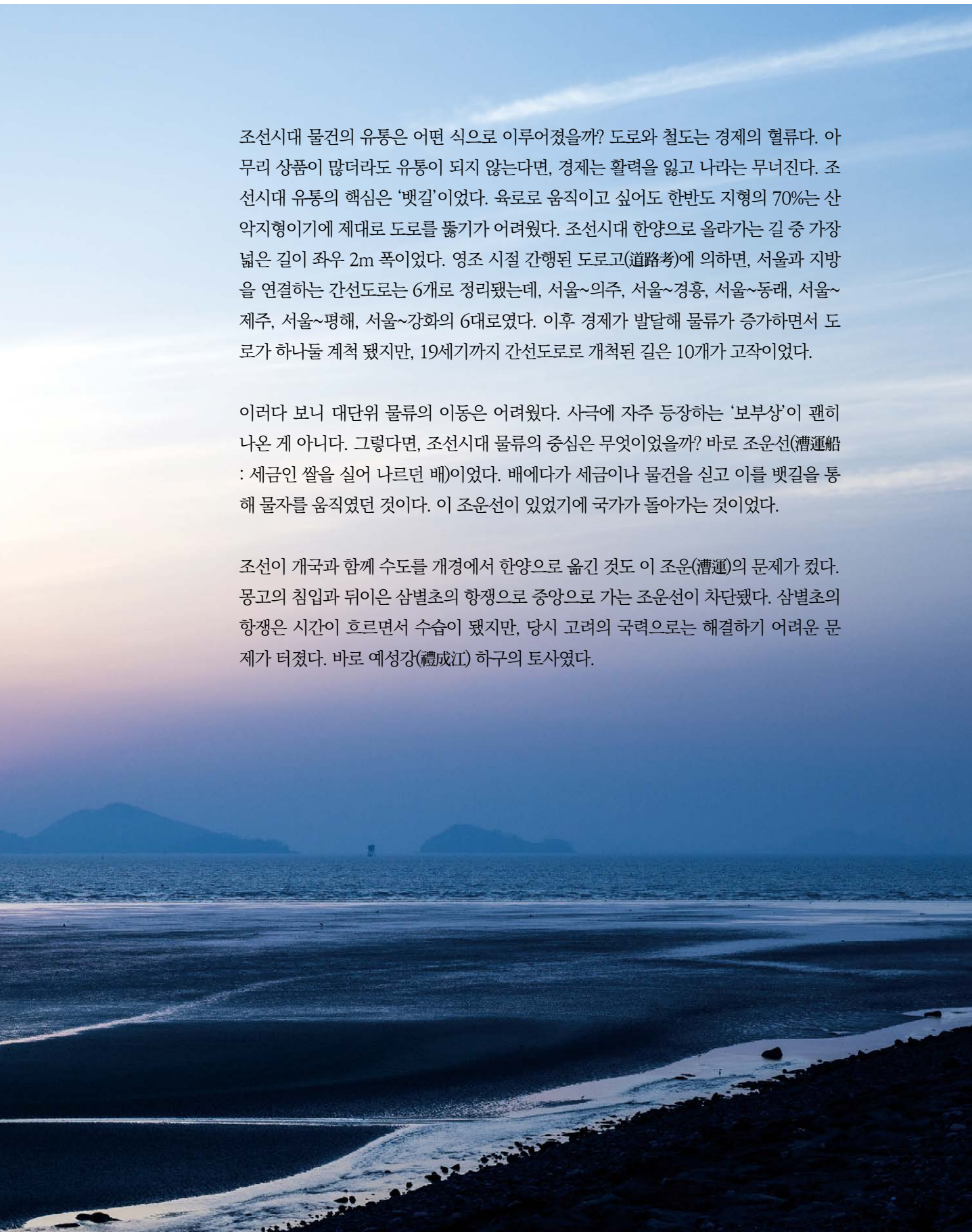
세금 운송 때문에 안면도가 섬이 됐다?

글. **이성주** 『엽기조선왕조실록』 저자, 문화 칼럼니스트

조선시대 물건의 유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도로와 철도는 경제의 혈류다. 아무리 상품이 많더라도 유통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는 활력을 잃고 나라는 무너진다. 조선시대 유통의 핵심은 '뱃길'이었다. 육로로 움직이고 싶어도 한반도 지형의 70%는 산악지형이기에 제대로 도로를 뚫기가 어려웠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 중 가장 넓은 길이 좌우 2m 폭이었다. 영조 시절 간행된 도로고(道路考)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6개로 정리됐는데, 서울~의주, 서울~경흥, 서울~동래, 서울~제주, 서울~평해, 서울~강화의 6대로였다. 이후 경제가 발달해 물류가 증가하면서 도로가 하나둘 계척 됐지만, 19세기까지 간선도로로 개척된 길은 10개가 고작이었다.

이러다 보니 대단위 물류의 이동은 어려웠다.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보부상'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물류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조운선(漕運船 : 세금인 쌀을 실어 나르던 배)이었다. 배에다가 세금이나 물건을 싣고 이를 뱃길을 통해 물자를 움직였던 것이다. 이 조운선이 있었기에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었다.

조선이 개국과 함께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긴 것도 이 조운(漕運)의 문제가 컸다. 몽고의 침입과 뒤이은 삼별초의 항쟁으로 중앙으로 가는 조운선이 차단됐다. 삼별초의 항쟁은 시간이 흐르면서 수습이 됐지만, 당시 고려의 국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터졌다. 바로 예성강(禮成江) 하구의 토사였다.



物流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고, 이 개경의 동맥이 예성강이었다. 조선시대에도 그렇지만, 각 지방의 물자는 뱃길을 따라 개경까지 왔고, 이게 개경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예성강을 통해 들어오는 거였다. 그러나 예성강 하구에 토사가 계속 쌓이면서 조운선(漕運船)의 운항과 접안이 어려워지게 됐다. 물류가 막히니 당연히 물가는 폭등하게 됐고, 개경의 민심은 흉흉해지게 된다. 이성계가 개경을 버리고 한양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물류' 때문이다.

조선이 개국한 뒤에도 이 물류 문제는 국정의 주요 과제였다. 당장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강에 물류가 계속 들어와야 했다. 문제는 뱃길이란 게 육로보다는 '덜' 안전하다는 부분이다. 일기가 불순할 때에는 항구에 발이 묶일 때도 있고, 설령 파도가 잠잠해진다 쳐도 언제 바다가 돌변할지는 모르는 상황. 그렇기에 조운선의 안녕은 국정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안녕의 대상이 돼야 할 뱃길이 조선의 세금을 집어삼키는 일이 연거푸 터졌다.

천수만(淺水灣)이 문제였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말하자면, 충청남도에 위치한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만인데, 동쪽으로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에 접해있고 북쪽과 서쪽은 태안군의 태안반도와 안면도가 위치해 있다.

조선을 먹여 살렸던 지역은 삼남지방(三南地方 : 지금의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이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물산을 가져와 조선이 돌아간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를 붙잡고 버텼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올라오던 조운선(漕運船)이 천수만에서 침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아예 외해(外海)로 빠지는 뱃길도 고민해봤지만, 이 경우 태풍이 불면 꼼짝없이 침몰할 수 있기에 외해로 빠지는 건 포기했다. 연근해를 돌아 돌아 움직이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서해는 교과서에서 실릴 정도로 유명한 리아스식 해안이다. 간만의 차이도 심하고, 꾸불꾸불하게 암초가 많아서 뱃길 따라, 조류 따라 움직이다 암초에 걸려 배가 난파하는 경우가 있었다. 태풍을 피하자니 암초를 만난 것이다.

삼남지방의 중요한 세수(稅收)가 바다에 수장되는 걸 두 손 놓고 바라보던 조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렸다. 이때 눈에 들어온 게 안면(安眠)이었다.

"편안하게 조수가 쉬는 곳"

안면만 없다면, 호수가 된다. 태안반도가 파도를 다 막아주고, 조수도 쉬어가는…물길로서는 최고의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조선 최고의 호조판서 중 한 명인 김육(金堉)이었다.

"안면을 섬으로 만든다."

인조 16년. 1638년의 일이었다. 졸지에 태안반도 안면읍 사람들은 육지 사람에서 안면도(安眠島) 사람이 되게 됐다. 이구동성으로 섬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 애원을 했지만, 김육의 생각은 확고했다.

"세금이 바다에 수장되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김육은 남면과 창기리 사이를 뚫어 안면읍을 '안면도'로 바꿔 버렸다. 김육 덕분으로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올라오던 조운선은 난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으니, 조정은 말 그대로 앓던 이를 쏙 뺀 느낌이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명(明)이 있으면 암(暗)이 있는 법, 수 천 년 동안을 육지 사람으로 살던 안면도 사람들은 세금을 좀 더 안전하게 운반해야겠다는 이유로 졸지에 섬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을까? 이런 그들의 원한이 해결된 것은 1968년 안면도에 연육교를 놓으면서였다. 대한민국에서 6번째로 큰 섬이었던 안면도가 3백여 년 만에 다시 육지가 되었다.

지금의 시점으로는 황당한 이야기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조선으로서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쌀로 돌아가던 게 당시 조선의 경제 상황이었다. 이 수송로를 지키겠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세금을 지키기 위해 육지를 섬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 정도로 당시 관료들은 고민을 했다. 예나 지금이나 국자재정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국가 시책이었던 것이다.

**세금을 지키기 위해 육지를 섬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 정도로 당시 관료들은 고민을 했다.
예나 지금이나 국자재정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국가 시책이었던 것이다.**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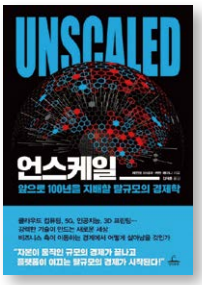
자료 제공. 교보문고

저 자 성정원
출판사 맘에드림
발간일 2019년 09월

경제를 읽는 쿨한 지리 이야기

십대들을 위한 경제지리학

이 책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생각하는 청소년' 8권 시리즈 중 한 권으로, 현대사회의 최대의 화두인 경제에 초점을 맞춰 지리를 탐구하는 경제지리학 책이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지리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보이는 현상 이면에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추론하고 생각해보게 해준다. 이 책을 통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넓은 시야와 깊은 사고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 자 헤먼트 타네자, 케빈 매이니
옮 김 김태훈
출판사 청림출판
발간일 2019년 10월

언스케일

앞으로 100년을 지배할 탈규모의 경제학

이 책은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 앞에서 살아남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20세기까지 세계 모든 경영자들이 기업 규모에 집중했다면, 21세기부터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임대'가 가능해지면서 소규모의 기업 중심으로 변화했다. 이제 기업은 규모는 작고 심플하게 그러나 더욱 민첩한 조직의 형태로 효율적인 기술을 이용해 고객을 만족시킨다. 이처럼 탈규모의 경제 비즈니스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미래를 살펴보며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저자의 경험을 통해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저 자 가게야마 가츠히데
옮 김 이연희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발간일 2019년 09월

한 권으로 끝내는 경제학 명저 50

애덤 스미스에서 피케티까지 세상을 바꾼 경제 지식

이 책은 사회과학 중에서 먹고사는 문제이자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경제에 초점을 맞춰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경제학 명저 50권의 핵심 이론을 뽑아냈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존 케인스에서 토마 피케티까지 각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핵심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해 이해하기 쉽도록 쓰였다. 일본 최대 입시학원 강사인 저자는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각종 용어를 최대한 풀어 쓰고 도표를 활용해 설명하여 강의를 듣는 것처럼 소개한다.

저 자 토리텔러
출판사 미래의창
발간일 2019년 10월

세상 친절한 경제상식

뉴스가 들리고 기사가 읽히다

흔히 경제 공부의 첫걸음으로 기사 읽기를 추천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외 경제의 흐름과 뉴스 기사에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경제 개념들을 이해하기 힘든 이들에게 든든한 해결책이 되어줄 경제 입문서다. 20년 가까이 뉴스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며 브런치에서 경제 멘토로도 활동 중인 저자가 경제의 핵심 요소를 골라 친근한 비유로 알기 쉽게 풀어냈다. 기본 용어부터 최신 이슈까지 낯선 개념들을 이해하고 경제의 기초를 다지기 원하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 사회적 가치 경영 노력 지속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9월 5일(목) 사회적가치추진단 등 70여 명이 함께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안전경영, 인권경영, 고객중심경영 등 10가지 가치창출 분야를 제시했다. 업무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재정정보분석본부, dBrain운영본부, e나라도움운영본부 등 임직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봉사활동 수행 및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 토론 등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상생과 복지 증진을 위해 '중구자원봉사센터(9.9)', '중구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9.10)'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보조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공단(9.19)'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향후 한국재정정보원은 사회적 가치 경영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예정이다.

dBrain운영본부 찾아가는 현장방문 (법무부)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9월 30일(월), dBrain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 수렴 및 논의를 위한 법무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금번 현장방문에는 법무부 국유재산 실무자 19명과 한국재정정보원 자산팀 담당자 6명이 참석하였으며, dBrain 국유재산 업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논의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dBrain운영본부 담당자 검토 후에 법무부 의견제안자에게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신간 보고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재정수지 산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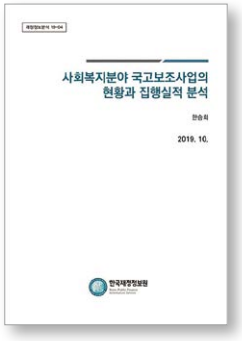
– 김명규 부연구위원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이외에 재정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수지의 활용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기초재정수지, 경기조정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의 산출방안 제시하였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과 집행실적 분석」

– 한승희 부연구위원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교부한 이후 최종 수령자나 보조사업자에게 신속히 전달·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검토와 함께 유형에 따른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 김선옥 부연구위원

재정융자는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금융 활동으로, 본 보고서는 재정융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되었다. 재정융자의 개념과 관리절차,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융자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국가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융자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시계열로 제공하고 있다.

월간 나라재정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월간 나라재정〉을 구독하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월간 나라재정〉을 만들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기간 2019년 10월 1일(화) ~ 11월 10일(일)

당첨자 발표 당첨자 개별 문자 발송(11월 중)

설문조사 참여방법 QR코드 또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 후 참여

http://naver.me/5HNrj6Lu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분을 추첨하여
따뜻한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애 독 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문 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기 안정화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 제도를 일컫는 말은?

□□□□□□□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 이메일 】
narajaejung@kpfis.kr

【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
2019. 10. 30.~2019. 11. 15.

POSTCARD

9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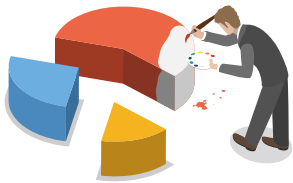
☆ 퀴즈 정답 ☆
국민참여예산

☆ 상품 당첨자 ☆
dan********@gmail.com
win*****@naver.com
woo******@yahoo.co.kr
ysw******@naver.com
cym*******@naver.com
shl******@naver.com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티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청년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청년희망 사다리'를 통해
최근 들어 청년의 구직난이 심각해 일자리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청년 계층 간의 단절을 해소하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청년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이어주는 사다리의 역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WOO******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ISSN 2508-8971